10.15686/fkl.2024..61.246 OPEN ACCESS

『한양』에 나타난 '자이니치 디아스포라'의 리저널리즘 계보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젠더」

-담론을 중심으로

김복순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명예교수

목차

1 기지국가 일본 내 『한양』의 '국민되기' 전략
2 방법으로서의 '자이니치 디아스포라 민족주의'와 젠더
2.1 한청동·한학동과 『한양』: '이향민 남성'의 형식
2.2 '선 민주-복지론'과 혁명주체로서의 여성시민
2.3 경제적 민족주의와 '가족-국가'의 비유
2.4 내재적 발전론의 '선도': 비주체적 여성
2.5 여성의 보편성/특수성 인식과 여성영웅론
3 맺는말: 아시아 리저널리즘의 제6계보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A2A01038140).

본 연구는『한양』(1962.3, 도쿄 발행)의 담론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이다.『한양』과 '재일한국청년동맹', '재일한국학생동맹'과의 구체적 연결고리도 최초로 밝혀냈다.

『한양』의 방법론은, 선진국 일본에서 탈식민의 문제를 '직접 경험'하면서 어떤 가능성의 지표를 설정할 수 있었던 '자이니치 디아스포라'이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또다른 억압의 이양' 속 중층적 타자인 자이니치 디아스포라가 '국민'이 되고자 충동했을 때, '자이니치 디아스포라 민족주의'라는 독특한 방법론이 도출될 수 있었다. '자이니치 디아스포라 민족주의'는 '선 민주-복지론', 수출입국론 거부-내수 증대의 경제적 민족주의, 내재적 발전론 등을 지향하면서 '다른' '아시아-한국'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양상은 '아시아 리저널리즘'의 기존 계보와 다른 것이었다. 발전론과 민주론이 결합된 형태로서, 제6계보라 명명되었다. 특히 내재적 발전론을 강력하게 '선도'한 점은 큰 업적이었다.『한양』의 기획은 정치, 경제, 문화, 사상의 각 영역에서 정합적으로 잘 구현되어 있었다.

정치담론에서는 여성(성)을 혁명주체, 여성영웅으로 호명하기도 했지만, 신탁통치를 '국제적 정의를 윤락시키는 폭행'이라 언급하면서 미·소/한국=남자/여자의 성적 은유를 활용하기도 했다. 경제발전론에서는 가족과 국가가 동일시되고 있어 남성젠더적이었다.

잡지라는 특성상 젠더인식의 상호모순성이 다소 확인되지만, '여성' 기획을 다양하게 마련하는 등 여성(론)에 대한 관심은 독보적이었다. 다만 '자이니치 디아스포라 민족주의'의 '대표자'는 '남성(성)'으로, 그 수행자는 '여성(성)'으로 설정하는 등 모종의 위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는『청맥』(제5계보)의 선진성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국문핵심어: 3자(三自), 4반(四反), 민단, 그라비아, 김인재, 한청동, 한학동, 자이니치 디아스포라 민족주의, 경제적 민족주의, 내재적 발전론, 선 민주-복지론, 여성시민, 민족공업화론, 하타다 다카시, 가지무라 히데키, 한일회담, 가족-국가,

1 기지국가 일본 내 『한양』의 '국민되기' 전략

60년대의 국제적 양상은 50년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61년 비동맹회의가 창설되고, 63년에는 아프리카통일기구가 창립되는 등 역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60년 전후 반둥회의(55년)가 좌절되면서 권위주의 독재체제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한국을 비롯해 '권위주의 지배체제'로 이어졌고, 이는 아시아·아프리카의 보편적 현상[1], '발전 측면에서의 실패'[2]로 평가되기도 했으며, '새로운 민주주의로서의 독재'가 후진국 유형인가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졌다.[3] 반둥에서 주창한 '아시아·아프리카의 제3의 길'[4]이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64년에는 드골의 중공 승인이 이루어지면서 미·소 양국 체제가 위협받기 시작한다. 이는 냉전이 미·소 양극에서, 3극[5] 또는 다극체제로 변경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주지하다시피 제2차대전 후 미국은 지역통합전략으로 세계체제를 재편했는데, 이때 동북아의 구심점으로 낙점된 것이 일본이었다. 이미 49년 미국은 일본을 '패전국'이 아닌 강력한 '군사적 동맹국'으로 인정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전략에서 중요한 구심점으로 설정했다. 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후 일본은 한미군사동맹의 기지를 제공하는 군사적 후방이자 병참기지로 상정되었다. 미일안보조약(51) 이후 일본은 고성능의 '기지국가'[6]였다. 이러한 미국과 일본의 공모·연

1 우병규, 「시련받는 후진국 민주주의」, 『청맥』 제4호, 청맥사, 1964.12, 26쪽. 우병규는 당시 경희대 조교수였다.

2 오드 아르네 베스타, 옥창준 옮김, 『냉전의 지구사』, 에코리브르, 2020, 164쪽.

3 앞의 책, 186쪽.

4 네루이즘(인도), 아랍민족주의(이집트), 사회개량형 민주주의(필리핀), 교도민주주의(인도네시아), 기본적 민주주의(파키스탄) 등은 '신생국 이데올로기'로 언명되었다. 신생국강좌, 『신생국의 이데올로기』, 세계사, 1966, 1-320쪽.

5 John Lewus Gaddis, *We Now Know*, New York: Oxford Univ. Press, New York, 1997, p.293.

6 남기정, 『기지국가의 탄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79-136쪽.

대는 비유럽지역을 대상으로 한 미국계획 수립의 주요모델이었다.[7]

'일본의 탈제국주의화의 실패'[8]로 평가되는 이 과정에서 일본은 책임져야 할 제국주의의 과거를 '봉인'해 버린다. 피식민지였던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일본의 뒤틀린 관계는 한일회담에서도 반복되었다. 미국은 한국에서의 지출을 줄이고 동북아의 안정을 유지하려 했고, 일본은 50년대 이후 소위 '한국전쟁 특수'로 급속히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시금 대외 팽창욕구를 드러내고 있었다.[9]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성장에 매달렸고 한일회담을 그 계기로 삼으려 했다. 이처럼 한일협정은 미국, 일본, 박정희 정권의 이해관계 속에서 체결된 것이었다.

『한양』은 5.16 후 박정희 정권이, 51년부터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던 한일회담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는 시기[10]에 창간(1962.3)된다. 즉 『한양』은 4.19[11] 및 한일회담의 영향 아래 창간된 잡지라 할 수 있다. 『한양』은 '일본 도쿄'에서 22년여에 걸쳐 간행된(177호) 월간 종합 잡지[12]로서, 비총련계 '자이니치(在日)'[13]에 의해 '유일하게 한국어로 간행'된[14] 잡지이다.

---

7 오드 아르네 베스타, 앞의 책, 57쪽.

8 리오 T.S. 칭, 유정완 옮김, 『안티-재팬』, 소명출판, 2023, 13쪽.

9 요시자와 후미토시, 엄태봉 옮김, 『한일회담 1965』, 이담북스, 2022, 10쪽.

10 1962년 김종필과 오히라 마사요시 간의 협상·합의가 '김-오히라 메모'로 발표되면서 한일회담이 급진전된다.

11 『한양』에서는 4.19를 정치사적, 역사적, 운동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보며, 시기 구분점으로 규정한다. 매년 4월호마다 4.19 특집, 좌담회 또는 관련 논문들이 게재된다. 이에 대해서는 2장 1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12 1962.3부터 1984.3까지 발행되었으며, 사장은 김기심, 편집 및 발행인은 김인재이다. 1969년 8·9월호부터는 격월간으로 발간된다.

13 일본 거주 동포에 대해서는 재일 조선인, 재일 코리안, 재일 한국인 등 다양한 명칭이 존재한다. 재일 조선인에는 북한 중심적 관점이, 재일 한국인에는 남한 중심적 관점이 투영되어 있으며, '재일' 또한 '본국' 중심적 용어라 할 수 있다('재일 조선인'이란 명칭이 '남과 북 분단 이전을 염두에 둔 것'이란 의견도 있으나 위와 같은 다양한 용어의 등장은 바로 이 판단과 차별화 하기 위한 의도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현재적 관점에서 볼 때 위 의견이 보편적이라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일본 내에서의 차별' 및 각각의 '자기의식'이 은폐되어 있을 뿐 아니라, '통합'의 관점이 배제된 이분법적 시선이다. 실제로 민단과 총련 외에 중립적 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법적 시선은 실재와 거리가 있을 수 있다. 본고

『한양』은 60년대의 진보적 잡지 『청맥』과 더불어 4.19 이후의 시대적 명제에 비판적으로 접근한 지식인 잡지였고, 특히 남북한 및 일본, 외국 학계의 동향 및 정치, 경제, 문화와 관련한 당대의 제 이론을 섭렵해 소개하는 등, 『사상계』 『청맥』 등과 다른 시각을 제공하였다.

이런 이유로 『한양』은 『청맥』 『사상계』와 또 다른 방향에서 지적인 탐구의 대상이었다. 『사상계』가 친미· 반공이라는 기본틀을 유지했고, 『청맥』이 친미·반공의 틀을 벗어나 탈식민, 탈냉전을 지향하고자 했다면,[15] 『한양』은 '자이니치 다이스포라'의 트랜스내셔널/로컬과 관련한 중층적 시선을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남-북-일' 세 나라 사이에서,[16] 그리고 이를 둘러싼 국제관계 속에서,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중층성을 드러낸다. 이런 이유로 자이니치는 곧 국제적 존재[17]라고 언급되기도 했다.

『사상계』가 수용한 자유민주주의는 냉전 민주주의·냉전 자유주의의 성격이 짙었고,[18] 탈냉전지(知)를 지향한 『청맥』이 이를 신랄하게 비판했다면, 『한양』은 『청맥』과 또 다른 측면에서 '자이니치 디아스포라'라는, 당시로서는 매우 '참신하고도 글로벌한' 관점을 보여주었다. 국내보다는 글쓰기의 자유가 더 보장되어 있었던 탓에 당대의 진보 지식인들이 대거 참여해서, 국내 필자의 비중이 거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였다. 문학(비평)의 경우 김우종, 구중서, 임헌영, 장백일, 임

에서는 '자이니치'라는 개념을 동원하고자 한다. 이 용어는 위와 같은 이분법적 관점을 배제하면서, 일본 내에서의 차별 및 남북한으로부터 각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영향을 받는 지점도 내포하는 동시에 각각의 자기의식 및 지향점도 반영하고 있어, 이미 '차별'과 '민족' '신분' '계급' '디아스포라'의 요소가 함유된 용어이다.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이 삶의 공간에서 '자이니치'로 불리고 있다. '디아스포라'를 특히 강조할 경우 본고에서는 '자이니치 디아스포라'로 호칭하기로 한다.

14 김인재, 「후기에 대신하여」, 『민족지성의 길』, 일본 도쿄: 한양사, 1974, 405쪽.

15 김복순, 「『청맥』에 나타난 리저널리즘의 탈냉전지(知)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젠더-특집 및 권두언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5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225-270쪽.

16 윤건차, 『자이니치의 정신사』, 한겨레 출판, 2016, 119-218쪽.

17 「대담: 한국사 연구의 자세」(55호, 66.9)에서 하타다 다카시는 '재일 한국인'을 일컬어 국내적 존재이면서도 국제적 존재라 언급한 바 있다.

18 김복순, 「학술교양의 사상형식과 '반공 로컬-냉전지(知)'의 젠더」, 『여성문학연구』 제2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73-125쪽, 참조.

중빈, 남정현, 조정래, 천승세, 하근찬, 김지하, 박봉우, 박두진, 양성우, 고은, 조태일, 김수영, 신동엽, 이성부 등 50-60년대에 비판적 인식을 가진 작가가 대거 참여하였다.

특이한 점은 문학을 제외한 정치·경제·사회 등의 담론은 거의 '자이니치'에 의해 집필되었다는 점이다. 필진도 영역별로 거의 '고정'되어 있었다. 정치 분야에는 강영준, 김인재, 백윤철, 강태욱, 신상호, 함원태 등이, 경제분야에는 김기심, 김경진, 임경암, 박영철, 박원석, 이태용, 오윤석, 주석균,[19] 이종순 등이, 사회·문화 영역에는 전세민, 김천석, 김소운, 김을한, 이인호, 이문석 등이, 학술 영역에는 한병식 문철호 등이, 여성 분야에는 최용진, 문철호 등이, 문학비평(이론)에는 장일우, 김순남 등이 주요 필진으로 활동하였다. 이들은 자이니치 디아스포라 엘리트들로서,[20] "잡지 『한양』에 바치는 억누를 수 없는 정렬과 그가 가지는 존재이유의 정당성"[21]을 발간 사유 중 하나로 꼽았다. 필진의 논조는, 콜로키움이라도 진행한 듯이,[22] 잡지로서는 매우 드물게, '거의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한양』이 독자로 설정한 1차 대상은 '후진국 한국인'[23]이었고, 2차는 '점차 민족성을 잃고 일본에 동화되어 가는 자이니치'였다. 일본(인)은 거의 독자로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한양』은 72년의 유신선언, 74년의 문인간첩단 조작 사건[24]을 계기로 국내

---

19 주석균은 『사상계』 및 『창작과 비평』에도 글을 게재한 바 있다.

20 일부의 경우 국내 필자가 필명으로 발표한 것일 수도 있으나, 이들의 서지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어 단언하기 어렵다. 『재일코리안 사전』(선인, 2012)에는 『한양』의 최다 필자이자 핵심 필자인 편집인 김인재조차 등재되어 있지 않을 정도이다. 『한양』 창간호 편집후기에서는, '당시 일본에서는 자이니치 고학력자들의 취업이 매우 어려운 상태여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나와 각종 연구에 종사하고 있어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숨은 식자들에게 연구의 발표와 논단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본고에서는 정치, 경제 영역의 대다수의 필자를 자이니치로 추정한다. 『한양』 창간호, 「편집후기」, 한양사, 일본 도쿄, 1962.3, 156쪽. 이후 『한양』 소재의 글은 권호 및 간기만 표기하기로 한다.

21 앞의 글.

22 '편집위원회'가 언급되기는 하였으나, 그 구체적 활동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23 남한, 즉 대한민국을 의미한다.

24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장백일, 「세칭 문인간첩단 사건」, 한국문인협회 편, 『문단유사』, 한

에서보다 더욱 첨예한 비판을 행하기 시작한다(시기 구분점[25]). 문학 관련 출판물의 경우, 진보적·비판적 반정부적 목소리를 담은 출판물은 국내에서보다 도쿄의 한양사에서 먼저 간행되었다.[26] 검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민주-발전을 향한 『한양』의 제3의 방법론 및 열정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양』에 대한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 해도 무방하다. '문인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인해 20세기에는 거의 연구대상으로 채택되지 못하였고, 21세기에

국문인협회 편, 2002, 57-62쪽; 임헌영, 「74년 문인간첩단 사건의 실상」, 『역사비평』 제13집, 역사비평사, 1990.겨울, 283-301쪽; 강진호 외, 『증언으로서의 문학사』, 깊은샘, 2003, 151-157쪽; 한승헌, 「『한양』 관련 문인 사건」, 『권력과 필화』, 문학동네, 2013, 50-54쪽, 131-140쪽; 임유경, 「낙인과 서명」, 『상허학보』 제53집, 상허학회, 2018, 191-236쪽 등이 있다. 2009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상규명이 이루어져 전원 무죄로 판명되었고, 명예회복 및 국가배상이 이루어졌다.

25 72년 3월 창간 100주년을 맞아 『한양』의 비판적 목소리는 더욱 확대되기 시작한다. 72년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 한청동과 한학동이 민단에서 산하단체 인정을 취소당한 해이기도 하다. 『한양』은 유신체제 비판운동에 가담하다가, 73년의 김대중 납치사건에 따른 한민통의 결성과 일한연대연락회의와의 본격적인 민주화 운동 연대가 시작된 후, 74년 문인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결정적인 변곡점을 맞는다. 이후 『한양』 잡지는 국내에 반입도 되지 않는다. 또 국내 필자를 섭외할 수도 없게 되자 『한양』은 '해외 한민족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 72년 이후는 '총련 이데올로기'에 맞서 '재일 이데올로기'라는 새로운 사상 노선이 부상하는 시기인 동시에, 『한양』이 한일연대 및 해외 디아스포라 연대를 본격적으로 구축하면서 '자이니치성'을 새롭게 만들어 가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72년을 중시기 구분점으로 설정한다. '유사-민정' 이양이 이루어진 64년, 한일회담이 성사된 65년, 문인간첩단 사건으로 피소된 74년은 소시기 구분점이고, 한청동 한학동에 대한 민단 산하단체의 자격이 취소되고 유신이 단행된 72년은 중시기 구분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시기 구분점까지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26 남정현의 경우 『청맥』에 실은 「혁명 후기(제목 일부 변경)」(4호, 1964.12)보다 빠르게 『한양』(20호, 1963.10)에 「혁명 이후」를 싣고 있었으며, 양성우의 『노예수첩』도 국내보다(1985) 빠르게 78년에 출판하였다. 『김지하전집』도 한양사에서 먼저 75년에 출판하였다(국내에서 전집이 출판된 것은 90년). 『계간 삼천리』(창간: 1975.봄)에도 김지하가 소개되지만 일부 작품이고, 전집을 먼저 간행한 것은 『한양』을 발행한 한양사에서였다. 「혁명 후기」와 「혁명 이후」의 차이에 대해서는 김복순, 「『청맥』의 소설에 나타난 리저널리즘과 (국가)폭력의 젠더」, 『여성문학연구』 제6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3, 216-217쪽, 참고.

와서도 '문학비평'과 '시' 연구가 압도적이었다.[27] 최근 들어 60년대 비평사의 복원, 디아스포라, 이중 언어, 민단 내의 대립, 한일연대운동 및 해외한국 민주화 운동 관련 등과 관련한 중요한 성과가 이루어졌지만,[28] 민족주의와 자유·민주 등의

27 고명철, 「1960년대의 『한양』에 실린 소설의 문제의식」,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제46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0.3, 197-223쪽.; 고명철, 「민족의 주체적 근대화를 향한 『한양』의 진보적 비평정신」, 『영구혁명의 문학들』, 국학자료원, 2012, 73-100쪽.; 하상일, 「1960년대 현실주의 문학비평연구: 『한양』『청맥』『상황』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1-159쪽.; 하상일, 「재일 한인 잡지 소재 시문학과 비평문학의 현황과 의미-『조선문예』『한양』『삼천리』『청구』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42집, 한국문학회, 2006, 391-417쪽.; 하상일, 「1960년대 문학비평과 『한양』」, 『어문논집』 제50집, 민족어문학회, 2004, 287-325쪽.; 하상일, 「1960년대 『한양』 소재 재일 한인 시문학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47집, 한국문학학회, 2007, 201-227쪽.; 하상일, 「1960-80년대 재일 종합문예지 『한양』 게재 문학작품의 서지적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제74집, 한민족문화학회, 2021, 47-78쪽.; 김유중, 「장일우 문학비평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7집, 한국현대문학회, 2005, 389-421쪽.; 박수연, 「1960년대 시적 리얼리티 논의-장일우의 『한양』지 비평과 한국문단의 반응」, 『한국언어문학』 제50집, 한국언어문학회, 2003, 217-238쪽.; 손남훈, 「『한양』 게재 시편의 변화과정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70집, 한국문학회, 2015, 137-188쪽.; 손남훈, 「『한양』 게재 재일 한인 시의 주체 구성과 언술 전략」,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16, 1-245쪽.; 손남훈, 「4.19 혁명정신의 계승과 정권 비판 논리」, 『문창어문논집』 제52집, 문창어문학회, 2015, 215-254쪽.; 손남훈, 「1960년대 『한양』의 민족주체성 회복 담론」, 『인문학연구』 제56집,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8, 381-410쪽.; 이헌홍, 「『한양』 소재 재일 한인문학의 연구방향과 과제」, 『한국민족문화』, 제25집,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5, 101-122쪽.; 조현일, 「『한양』지의 장일우, 김순남 평론에 나타난 민족주의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3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543-572쪽.; 허윤회, 「1960년대 참여문학론의 도정: 『비평작업』, 『청맥』, 『한양』을 중심으로」, 상허학회 편, 『희귀잡지로 본 문학사』, 깊은샘, 2002 등이 있다.

28 비평사의 복원과 관련해서는 고명철, 「민족의 주체적 근대화를 향한 『한양』의 진보적 비평정신」, 『영구혁명의 문학들』, 국학자료원, 2012, 73-100쪽.; 이중 언어와 관련해서는 이재봉, 「국어와 일본어의 틈새-『한양』『삼천리』『청구』의 이중 언어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47집, 한국문학회, 2007, 163-199쪽. 한청동·한학동 및 민단 내의 대립 분화과정에 대해서는 조기은, 「민단계 재일조선인의 한국민주화운동-재일한국청년동맹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59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0, 485-518쪽.; 김태기, 「한국정부와 민단의 협력과 갈등관계」,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제3권 1호, 전남대학교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 2000, 60-97쪽; 이진원, 「전후 재일코리안 청

교차 양상 및 트랜스내셔널/로컬 연관은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디아스포라'에 주목하면서도 후진성 및 식민성, 냉전성, 통일문제 등을 유기적으로 조망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타 잡지와의 방법론의 차이 및 민단 내에서의 『한양』의 '개혁의식'과의 연관성도 거의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한양』과 일본 내의 정치·사상과의 연관성은 거의 고찰하지 못한 상태이다.

『한양』에서는 '디아스포라'와 '자이니치성'이 강하게 작동하면서 '자이니치 디아스포라 민족주의'[29]라는 새로운 아시아 리저널리즘이 형성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아시아 리저널리즘과 관련해 5개의 계보가 규명되었는데,[30] 『한양』의 경우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한양』이 '세계' '근대' '국민국가' '발전' '자유' '민족' 등에 대

년 학생 운동의 흐름 및 성격」, 『일본학』 제48집,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9, 85-110쪽 등이 있으며, 한일연대운동 및 한국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에 대해서는 조기은, 「민단계 재일조선인의 한국민주화운동-민단민주화운동세력과 김대중의 '연대'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75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0, 115-151쪽,; 조은애, 「디아스포라의 교착과 '연대'의 임계」, 『디아스포라의 위도』, 소명출판, 2021, 331-392쪽. 등이 있다. 담론 연구로는 필자가 지원서를 신청(2022.1)한 이후 발표된 1편이 있다. 손남훈, 「『민족의 존엄』에 나타난 민족주체성 담론과 정치비판의 논리」, 『한민족문화연구』 제80집, 한민족문화학회, 2022.12, 127-160쪽.

29 넓은 개념의 '디아스포라 민족주의'와는 구별된다. '디아스포라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존리, 김혜진 옮김, 『자이니치』, 소명출판, 2019, 1-405쪽.

30 이전 연구에서 검토한 '아시아 리저널리즘'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 반공주의 우선성(제1계보), 발전론 우선성(제2계보), 반공과 발전론의 결합(우선성 없이)(제3계보), 중립주의(제4계보), 반(反)제·반식민·통일론과 '자유로서의 발전론'의 결합(제5계보)이다. 이 다섯 계보는 기본적으로 발전론을 취하고 있으며, 공산주의는 제외하였다. 중립주의의 경우도 공산-중립과 비공산- 중립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복순, 「『사상계』의 「움직이는 세계」에 나타난 리저널리즘의 계보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젠더」,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88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20, 93-137쪽.; 김복순,「『청맥』에 나타난 리저널리즘의 탈냉전지(知)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젠더-특집 및 권두언을 중심으로」, 앞의 글, 225-270쪽.; 김복순, 「『청맥』에 나타난 리저널리즘의 탈냉전지(知)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젠더 2-문학비평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5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294-339쪽, 참고.

해 상상하는 방법, '자이니치 디아스포라' 의식으로 '탈식민'을 다층화하는 방법, '자이니치 기획'이 민족·자유·민주·민중·계급·여성·노동 담론을 동원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것이다. 『한양』의 '근대화 전략' '탈냉전지(知)'가 서구/아(sub)서구/비서구 각 역내 및 특히 일본 '내'의 민족주의·민주주의 방법들과 어떤 차이를 드러내는지 검토하면서, 국민국가 만들기의 중차대한 과제와 '트랜스내셔널/로컬' '세계' '리저널리즘' 문제와의 연관을 분석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젠더'와의 연관 하에서도 검토할 것이다. '새로운 근대화'를 모색하고자 했던 『한양』이 발전의 '주체'로 기획한 대상은 누구였는지, 『한양』의 '발전(복지)론'에서 젠더의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고찰할 것이다. 젠더 연구는 기존의 철학적 방법을 탈/재구성하여 '새로운 합리성'을 모색함과 동시에 대안적 방법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국가 이미지의 구성도 젠더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31] 『한양』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이러한 작업이 정치하게 이루어진 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2 방법으로서의 '자이니치 디아스포라 민족주의'와 젠더

2.1 한청동·한학동과 『한양』: '이향민 남성'의 형식

60년 전후 자이니치는 '일본 속의 38도선'[32]으로 첨예화된다. 59년부터 북송사업(귀국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4.19와 5.16을 거치면서 자이니치는 '재분할되는 디아스포라'로 위치된다. 귀국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까지는 자이니치가 남북이라는 두 국가를 명확하게 '대립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따라서 이들의 정치적 귀속의식도 양분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33] 이들이 '남-북-일 세 나라 사이에서' '난민-경계인-국민-적'이라는 여러 정체성 사이를 넘나들면서 트랜스내셔널/로컬 사이의 '끼인 존재'로 부각된 것은 60년 전후부터였다.

---

31 실라 미요시 야거, 조고은 옮김, 『애국의 계보학』, 나무연필, 2023, 252쪽.

32 李瑜煥, 『日本の中の三十八度線』, 洋々社, 1980, 1-438쪽.

33 한영혜·김인수·정호석, 『경계와 재현-재일한인의 국적, 사회조사, 문화표상』, 한울, 2020, 34쪽.

GHQ(연합국 총사령부)의 일본점령정책이 민주화에서 '방공 기지화'로 변경[34]되면서 제국 일본의 전전의 책임은 '억압의 이양'[35]이란 논리 하에 '소거'되었지만, '자이니치'는 '소거되지 않은' 채 '과거의 식민 모국' 안에서 이중삼중의 차별과 배제를 감내해야 했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이 '이중삼중의 차별과 배제'는 '또다른 억압의 이양'과 연결되어 있다. 식민지 시기에는 제국의 이등신민(일본인), 47년 외국인 등록령 이후에는 조선 국적의 외국인, 48년 남북한 국가수립 및 50년의 한국전쟁 발발 후에는 조선/한국인(출신지 기준), 51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 후에는 일본 국적 상실 등, 정체성의 변동에 따른 혼란도 가중되어 갔다. 자이니치는 일본인/한국인/북한인/외국인/조선인, 일본인/비일본인/반일본인 등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고, 구체적으로는 남한/북한/선택거부/일본 중 네 가지였다. 선택거부는 남/북 분리 이전의 '조선'을 선택하는 것이고,[36] 일본은 일본에 귀화하는 경우이다.

전체적으로 민단보다는 총련의 우위 속에서[37] 60년대는 변곡점을 맞는다. 『한양』은 바로 이 변곡점 위에서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만들어내고자 활동하기 시작한다. 총련에서 민단으로의 우위가 뒤바뀌는[38] 60년대에 『한양』이 기치를 내걸고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

34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 박인동 역, 『일본 재판에 나타난 재일 코리안』, 세창, 2023, 40쪽.

35 마루야마 마사오는 일본군 병사의 가해심리를 '억압의 이양'이라 부른다. 즉 '위로부터의 억압감을 아래로 자의적으로 발휘하여 순차적으로 이양해 감으로써 전체의 균형이 유지되는 체계'를 의미한다. 마루야마는 이를 '근대일본이 봉건사회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큰 유산의 하나'라 보았다. '시민생활 또는 군대생활에서 압박을 이양해야 할 곳을 갖지 못한 대중들이 우월적 지위에 서게 될 때, 자신에게 가해지고 있던 모든 중압으로부터 일거에 해방되려고 하는 폭발적인 충동에 쫓기게 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면서, 마루야마는 제2차대전 중 일본군의 아시아 역내에서의 만행을 두둔하였다. 마루야마 마사오, 김석근 옮김, 「초국가주의의 논리와 심리」,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 한길사, 1997, 61-62쪽. 마루야마의 전후 사상에 대한 비판은 나카노 도시오, 앞의 책, 16-81쪽, 참고.

36 고사명, 박종명 등 6인의 '조선적(朝鮮籍)' 선택을 일종의 '사상' 선택이라 보기도 한다. 나카무라 일성, 정기문 옮김, 『사상으로서의 조선적』, 보고사, 2020. 1-308쪽.

37 한영혜·김인수·정호석, 앞의 책, 26-80쪽,; 미즈노 나오키·문경수, 앞의 책, 101-165쪽.

38 68년 이전까지는 북한 국적 선택이 우위였지만 68년을 기점으로 이후에는 이같은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한다. 한영혜·김인수·정호석, 앞의 책, 34-41쪽.

『한양』은 민단 내 산하단체 중 '민단 내 개혁'을 강조하면서 저항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던 '재일한국청년동맹'(이하 '한청동'), '재일한국학생동맹'(이하 '한학동'), '민단정상화 유지간담회(이하 유지간)'와 연관되어 있다. 민단은 50년대부터 한국정부와 밀착되어 있던 '민단 본부'[39]와 '민단 민주화'를 주장하는 '민주파'로 나누어진다. 한청동과 한학동, 유지간은 민단 내의 민주파로서 이단아·비주류파, 반박(주의)[40]으로 불렸다.[41] 물론 이들간의 차이도 있다. 『한양』은 5.16을 찬성했지만 한청동은 5.16을 반대했다. 『한양』은 민정 이양을 요구하면서 63년 말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부터 군사정권을 비판했고, 한학동은 처음부터 '5.16 쿠데타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차이는 있지만, 민주파로서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대응하고 있었다.

한청동, 한학동, 유지간은 '반박'으로 불리면서 권일(민단 단장) 등의 '친박'과 대립하게 되고, 62년 김금석 단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한다. 김금석 등이 결성한 유지간도 같은 이유로 62년 한청동과 더불어 민단 집행부로부터 정권처분을 받게 된다. 한일회담을 둘러싸고도 계속 갈등과 대립이 이어지다가, 한청동과 한학동은 72년 민단의 산하단체에서 취소되기에 이른다. 친박/반박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찬/반을 의미하지만, '이쪽도 저쪽도 아니'라는 『한양』의 편집인 김인재의 발언(74년)을 들어 '중립적'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한청동, 한학동, 유지간의 '반박주의'는 민단의 '주체성' 및 자이니치의 '민주화운동'과 연관되어 있다.[42] 이들은 한국에 대한 무조건적 추종을 거부하면서

---

39 당시에는 '민단 중앙'으로 불렸다.

40 반 박정희를 의미한다.

41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민단 50년사』, 서울신문사 출판사업국, 1997, 85-94쪽. 민단 내에서의 분파와 관련해 처음 언급한 것은 손남훈이다. 하지만 손남훈은 『한양』이 한청동, 한학동과 연결되어 있다면서도 그 근거를 광고주와 연결지어 언급할 뿐 구체적으로 그 실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손남훈, 「『한양』 게재 재일 한인 시의 주체 구성과 언술 전략」,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16, 1-245쪽). 두 번째는 하상일인데, 하상일 역시 그 근거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한양』이 '민단 내 좌파'였다고 주장한다(하상일, 「1960-80년대 재일 종합문예지 『한양』 게재 문학작품의 서지적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제74집, 한민족문화학회, 2021, 47-78쪽).

42 조기은, 「민단계 재일 조선인의 한국민주화운동-재일한국청년동맹을 중심으로」, 『한국학

디아스포라라는 자신들의 '위치성'을 '정시'하고자 했다. 친한/친북의 대립적 입장이라기보다,[43] '새로운 근대화', 즉 '자이니치 디아스포라'의 자기의식 및 정치적·문화적·사회적 지향점과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를 '민단 내 좌파'[44]로 규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민단 내 개혁' '자주' '주체성' 주장을 곧 '좌파'라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한양』은 5.16 군사쿠데타에 '찬성'했으며, 속표지에는 제호 아래 부분에 '혁명공약 6조'가 박스로 처리되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1963년 12월호까지 실린다),[45] '반박'이라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 또 상대방을 '좌파로 몰아' 제거하는 것은 민단 중앙파들이 민주파를 제거하고자 할 때 즐겨 사용했던 상투적 수법[46]이다. '근거 없는 빨갱이 꼬리표'는 '아무리 유능한 인물이라도 동포사회로부터 추방할 수 있고, 어떤 운동도 제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민족운동이 소홀해지고 재일동포의 민권이 황폐해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47]는 당시의 지적을 감안하다면 더욱 그러하다. 윤건차는 오히려 『한양』이 '반공 프레임 속에서 온건

연구』 제59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0, 485-518쪽.

43 많은 자이니치들이 총련과 민단을 넘나들었다. 자세한 사례는 한영혜·김인수·정호석, 앞의 책, 참조.

44 하상일, 「1960-80년대 재일 종합문예지 『한양』 게재 문학작품의 서지적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제 74집, 한민족문화학회, 2021, 54쪽.

45 전문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②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③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 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④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 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⑤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⑥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굳건한 토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46 주일 공관과 민단 본부측은 '빨갱이 꼬리붙이기'를 활용했다. 유지간 등 반정부적인 재일동포에게 '베트콩파'라는 기발한 이름을 붙였으며, 한학동에는 '수박'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윤건차, 앞의 책, 522쪽.

47 한청동 기관지, 『젊은이(若人)』, 제9호, 1968.11.21.자; 윤건차, 앞의 책, 522쪽에서 재인용.

한 논지를 전개'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48].

필자는『한양』이 '민주파' '반박' '개혁파'인 근거를 최초로 확인하였다.『한양』은 '반박'의 핵심에 해당하는 제27대 민단 단장 김금석과의 대담을 마련한 바 있으며(23호, 64.1), 또 59호(67.1)「그라비아」에서 '한학동 기념문화제'를 화보로 홍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4·19와 재일청년학생」(74호,68.4),「8·15와 재일한국학생」(78호, 68.8)의 좌담회에서 한청동, 한학동의 위원장을 초청해 대담한 바 있다. 제50호 기념호(66.4)에서는 한학동의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좌담을 통해 4.19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있을 뿐 아니라 한학동의 역할의 중요성 및 그 의미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또 좌담회「여성과 현실의식」(105호, 72.2·3)에서는 한청동의 여성 회원들을 초청해 당대 현실문제를 다루며 그 극복방법을 모색한 바 있다. 96호(70. 8·9)에서는 재일한국청년동맹중앙본부 편「재일한국인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서평을 게재하고 있다. 또『한양』창간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묘목심기운동'은 한청동이 실시했던 사업 중 하나이다. 창간사에서는 "한국의 정원에 한 그루 과실나무를 심는 원예사를 본받을 것"(9쪽)이라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구체적인 연결고리가 있음에도 아직까지 '개혁파' '민주파'와『한양』을 연결시켜 분석한 논문은 없다.

자이니치 디아스포라는 민족적 소수자(ethnic minority), '마이너리티 중의 마이너리티', '다중 로컬'인 동시에 '다중 약자'였으며, 혼종성, 복합성, 불안정성을 드러낸다. 식민지 상황이 종료되었음에도 지속되는 식민 종주국에서, 일본>한국, 내국인>외지인, 자이니치 내에서의 총련>민단, 민단 내에서의 친박>반박, 경제적으로도 계급적 약자에 해당한다. 자이니치는 전후 복구 이데올로기와 관련해서도 '잔여'(타자)에 불과했다.

하지만 자이니치는 일본>한국의 관계망에서 선진문명국인 '일본' 내에 거주하고[49] 그 선진성을 향유하는 존재라는 점에서는 '약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62년 동아일보가 주최한 좌담회「학술강연회를 마치고」에서, 재일학

48 윤건차, 앞의 책, 484쪽.

49 50-60년대에 일본으로 건너가 정착한 경우도 상당히 많다. 검열 등 정치적 이유 등등으로 일본이 한국보다 '자유가 보장되는 곳' '더 좋은 곳'으로 선택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김시종은 4.3 이후 도일했다.

생연구회인 신한학술연구회 회원인 발표자들은 문명적·경제적 '우위'의 위치에서 한국(인)을 바라보고 있음이 확인된다.

> 金　최근 방한한 朝日신문의 仁尾기자가 한국의 농업발전은 明治末期 정도이고 공업은 大正中期 정도라고 말했지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 심　…한국은 너무나 근대적이 아닙니다…
> 沈　…양이 너무 많더군요…비위생적이기도 해서 식생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되지 않을까…
> 金　한국청년들은 모두 다 키가 작은 것 같아요[50]

'한국은 너무나 근대적이 아닙니다'라는 언표는 한국(인)을 타자화하는 제3자적, 오리엔탈리즘적 시선을 확인시킨다. 한국인이면서도 한국인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배치하면서 식민적 주체와 동일한 시선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한국=자이니치/한국=문명/미개의 등식을 확인시킨다. 여기서 발화자의 '한국(인)'은 '같으면서도 다르'다. 자이니치 디아스포라는 '화이트 디아스포라'도, '네이티브 디아스포라'[51]도 아닌 '아(亞)-제국주의 디아스포라'라 할 수 있다. 자이니치 디아스포라에게는 '제국주의 디아스포라'(예: 재미 한인)에게서와 같이 '약자인 동시에 우월자'라는 '상호모순된 양가감정'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52]

이 '상호모순된 양가감정'은 다른 한편으로는 '억압의 이양의 또다른 형태'라 볼 수 있다. 차별과 배제의 시선을 받는 입장에서, 다시 똑같이 한국(인)에 대해 그러한 시선을 던지고 있다. 즉 식민/피식민의 억압 속에서 선진 문명국인 일본의 문화를 향유하고 있다는 우월성, 문명성이라는 자이니치 디아스포라의 인식 및 감정이 후진국 한국(인)에 순차적으로 이양되면서 자이니치 디아스포라의

---

50 「좌담회-학술강연회를 마치고」, 『한양』 제6호, 1962.8, 74-80쪽.

51 임경규, 『집으로 가는 길-디아스포라의 집에 대한 상상력』, 앨피, 2018, 1-354쪽의 분류를 참조.

52 51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조선인에 대해 응답자의 95%가 '싫어하는 민족'이라 답변했으며, 그 이유로 불결, 교활, 무례, 문화수준이 낮다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 바 있다. 한영혜·김인수·정호석, 앞의 책, 147쪽.

존재증명 및 모종의 해방감이 성취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자이니치 디아스포라의 양가감정은 '또다른 억압의 이양', 즉 트랜스내셔널/로컬 관계에서의 '억압의 이양'이라 볼 수 있다. 마루야마 마사오와의 차이가 있다면, 자이니치 디아스포라가 모국 근대화 실천이라는 '긍정성' '적극성'을 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러한 '또다른 억압의 이양' 속에서 자이니치 디아스포라는 한국에 대한 '개입' 전략을 방법론적으로 기획한다.

> …조국의 운명에 우리의 운명을 더욱 굳게 더욱 깊이 연결시키자.
>
> 바로 이러한 뜻에서 이제 우리는 여기 뜻있는 교포 인사들과 힘을 모아 잡지『한양』을 창간한다.
>
> 題하여 '한양'이라 함은 그 이름이 곧 조국을 상징하는 정다운 이름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한국의 오늘이 있고, 거기에 한국의 내일이 있기 때문이며, (…) 조국의 번영에 이바지하는 하나의 괴임돌로 자기의 사명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의 정원에 한그루 과실나무를 심는 말없는 원예사를 본받을 것이다.[53]

> …우리는 방관자가 아니다 (…) 우리는 수난의 역사의 증언자들이다[54]

> '민족의 양심'의 대변인으로서 또는 조국의 앞길을 밝혀주는 횃불이 되도록[55]
>
> (이상 밑줄은 필자가)

자이니치 디아스포라 중에는『한양』창간 당시만 해도 '한글맞춤법 하나 똑똑히 알지 못'[56]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였다. 그런 그들이 민족문제를 발견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국민으로 편입되고자 했다. '비방관자로서, 증언자로서, 민족의 양심

53 「창간사」,『한양』제1호, 1962.3, 8-9쪽.
54 권두언,「조국에 드리는 말」,『한양』제11호, 1963.1, 15쪽.
55 위의 글, 같은 쪽.
56 위의 글, 같은 쪽.

의 대변인'으로서 조국 재건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자이니치 디아스포라가 '스스로' '자동적'으로 국민이 되는 방법은 없었고, '자이니치성'의 투옥/탈옥 상태에서, 즉 '이향민 남성'의 형식으로 '한국에 개입'함으로써만 국민이 될 수 있었다. 괴임돌로, 원예사로, '횃불'로서 조국재건 및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해야만 그들은 비로소 국민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식민/피식민, 선진/후진, 문명/야만 관계를 타파, 극복하려는 '이향민 남성'의 트랜스내셔널/로컬 전략이 개재되어 있는 것이다.

'조언자'가 자이니치 디아스포라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부분이라면, '횃불'에서는 자이니치 디아스포라의 '이중 억압성, 열등성'이 은폐되면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부각되고 있다. '조언자'건 '횃불'이건 '인간-남성'을 '보편'으로 간주하는 젠더의식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의 젠더는 비젠더적이라기보다 남성젠더적이다. 『청맥』에서는 '남성이 아닌 것은 아닌'의 이중부정 형태로 당대 한국 및 남성(성)이 일단 부정된 후 '청년-남성(성)'을 대신 호명하면서 통일의 주체로 설정한 반면,[57] 『한양』에서는 50-60년대의 한국은 부정되었어도 남성(성)이 부정된 바는 없다.

2.2 '선 민주-복지론'과 혁명주체로서의 여성시민

『한양』에서는 4.19를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본다. 매년 4월호마다 4.19 특집, 좌담회 또는 관련 논문들을 대폭 게재하고 있을 정도이다. 4.19는 반부패 투쟁으로 시작되어 반독재 민주화 투쟁으로 이어졌고, 그 이념적 지향은 민족적 자주 수립, 민주주의 정착, 평화적 통일[58]로 평가되어 왔다. 『한양』에서 4.19는 '민주주의를 위한 커다란 전환점'[59], 한국근대사상 가장 빛나는 영향을 미래에 준[60]

57 김복순, 「『청맥』에 나타난 리저널리즘의 탈냉전지(知)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젠더-특집 및 권두언을 중심으로」, 앞의 글, 참조.

58 서중석, 『한국현대사 60년』, 역사비평사, 2007, 61-88쪽.; 6.3 동지회, 『6.3 학생운동사』, 역사비평사, 2001, 47쪽.

59 정영훈, 권두언 「4.19를 회상하여」, 『한양』 제26호, 1964.4, 4쪽.

60 송건호, 「4.19의 의의」, 『한양』 제38호, 1965.4, 10쪽.

사건, 한국민주화의 자오선,[61] 냉전의 메카니즘 속에서 서서히 탈각할 것을 독촉하는 사건[62]이며, 이 땅에 내셔널리즘의 바람을 불게 만든 사건이다. 또한 한국의 민권운동의 역사적 발전상 하나의 이정표이며 세계 민권운동에도 기여한 세계사적 운동[63]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학생들의 귀감이라는 일본의 칭찬을 듣게 만들고, 해외의 교포들로 하여금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든[64] 사건이다. 이는 4.19가 단순한 국내사건이 아니라 트랜스내셔널/로컬 관계에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시킨다.

4.19의 영향 아래 『한양』은 저항적 민족주의를 주창하고 나섰던 반둥회의 참가국들이 대부분 '독재'로 나아가는데 대한 경각심을 나타낸다. '민주주의를 일시 후퇴시키고' 독재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방법이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한양』은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이러한 경각심은 4반(反)에 더욱 경주하도록 만들었다.

> 이박사는 자유민주주의를 팔아 일인일당독재를 자행하였다 (…)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한국땅에 와서 권력유지의 방패로만 되어 왔다 (…) 생태의 기형성이 존재하는 것[65]

> 자유민주주의가 걸어왔고 또 그것이 빚어낸 것이 한국에서의 정치적 혼란, 경제적 파국, 사상문화적 걸식상태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사대주의를 정당화하던 자유민주주의자들은 (…) 한민족은 오늘 자유민주주의의 실태가 사대임을 정시하면서[66]

> 한국적 자유를 찾는 가장 선차적 문제가 외세의존에서 벗어나 하루속히

61 김인재, 「자유민주주의와 한국」, 『한양』 제31호, 1964.9, 25쪽.
62 송건호, 앞의 글, 11쪽.
63 김인재, 「4.19의 사적 지위」, 『한양』 제50호, 1966.4, 24-27쪽.
64 정영훈, 「권두언」, 앞의 글, 6-7쪽.
65 김인재, 「자유민주주의와 한국」, 앞의 글, 24-26쪽.
66 김종호, 「민족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한양』 제25호, 1964.3, 52쪽.

> 경제적 정치적 자립을 이룩하는 데 있다고 본다 (…) '자본의 생리'를 알아야 한다. 선진국 자본은 후진국 자본에 대해서 이질적인 산업구조를 요구하며 또한 근대화된 높은 소비성향을 요구하는 것이다 (…) 나라가 이렇게 자주성을 상실하고서 개인의 자유는 논의에 오를 수도 없다.[67]

> 민족주의란 포괄적으로 말한다면 민족의 종국적인 해방과 실질적인 독립, 자주를 위한 사상이며 행동이다 (…) 자립적인 민족들 사이의 평등한 상호관계를 요구하는 것이다 (…) 민족적 자유는...경제적 자립과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이 수행되어야만 한다 (…) 진정한 민족주의는 사대주의나 외세의존사상과 양립될 수 없는 것이다. [6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양』은 '자유민주주의'를 '사대'로 규정하면서, 외세의존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진정한 민주주의는 획득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한양』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전략적으로 거부하는 이유는 위에서 보듯, '독재' '후진국' '외세의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양』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민족주의가 이 사대적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반항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69]임을 분명히 피력한다. 또 '자본의 생리'를 언급하면서 세계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되어 가는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관계 뿐 아니라, 그 가운데서의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까지 언급해 주고 있다. 지난 이십년 간의 망각지대에 버려두었던 자아의 재발견 및 존재의 이유를[70] 도출해내는 한편, 트랜스내셔널/로컬의 관계망이 충돌하는 세계사적 전환점에서, 한국의 지향점을 냉철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위 인용문에서 확인되는 반봉건, 반외세, 반독재, 반매판(자본)의 4반(反)이념[71]은 바로 4.19 정신의 핵심이념이다. 이는 자유, 자주, 자립의 3자(自)로서 이

67 김종호, 「한국적 자유의 진단」, 『한양』 제21호, 1963.11,17-18쪽.

68 김종호, 「민족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앞의 글, 55-56쪽.

69 위의 글, 52쪽.

70 김인재, 「자유민주주의와 한국」, 앞의 글, 10쪽.

71 4.19 1주년을 맞아 서울대 학생운동 세력이 발표한 선언문 및 고려대학생들의 선언문에 등장한 3반 이념(반외세, 반부패, 반매판)에 '반독재'를 추가한 것이라고 지적된다. 김선

룩될 수 있다. 즉 3자는 4반의 필요충분조건이다.

> 4월혁명은 과거 이승만정권이 뿌려놓은 부패와 독재의 씨를 일소하기 위한 투쟁이었으며, 민주적 생활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 국내적으로 큰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압제 하의 각 국민들과 민족들 속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72]

> 4.19와 6.3의 항쟁은 (…) 4.19의 총성은 자유에 대한 부정이었다. (…) 자유가 부정되는 독립, 자유가 유린되는 자유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 외세와의 부동(附同)은 오늘의 비극적 상황, 민족 비운을 자초했다고 할 수 있다.[73]

약 8년여의 시차가 있지만, 위와 아래의 인용문의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위의 글에서는 4.19를 국제적으로 트랜스내셔널/로컬과의 관계 속에서 조망하면서 그 의의를 되짚는 가운데 특히 반독재, 반제, 반식민을 강조하고 있으며, 좀더 정교하게 다듬어진 아래의 글에서는 특히 4.19와 6.3을 동일선상에 위치시키면서 3자, 4반 이념 가운데 특히 '자주' '반외세'를 강조하고 있다. 즉 '모조된 자유민주주의'를 거부[74]하는 방법론이다.

『한양』이 창간호에서부터 주장한 3자, 4반 이념은 종간 때까지 유지된다. 이 3자-4반을 아우르는 개념은 '민주'이며,[75] 통일은 '궁극적'이라는 수식어와 같이

주·강석승 편저, 『4월 학생민주혁명』, 지식과 교양, 2013, 317쪽.

72 김인재, 「4.19의 교훈」, 『한양』 제2호, 1962.4, 49-51쪽.

73 함원태, 「우리의 길을 찾자」, 『한양』 제96호, 1970.8·9. 함원태는 『한양』의 핵심 필진 중 한 사람이다.

74 김인재, 「자유민주주의와 한국」, 앞의 글, 26-27쪽.

75 3자 이념에 대해서는, 4호 권두언 「민주주의와 특권의식」, 6호 권두언 「자주에의 모색」, 「조국에 드리는 말」(11호, 1963.1)의 권두언을 비롯하여, 「새로운 민주정치의 터전을 위하여」(8호, 1962.10), 「자립정신과 주체성」(16호, 1963.6), 「실학파의 자립정신」(16호, 1963.6), 「자주적인 자립경제 확립의 길」(17호, 1963.7), 특집 「민족성 자주성 주체성의 제 문제」「한국 경제 자립과 농업」(이상 20호, 1963.10), 특집 「경제자립만이 살 길이다」

제공된다는 점에서 『한양』의 방법론적 지향은 '선 민주-복지 후 통일론'으로 집약된다. 『한양』의 최종심급은 '통일'이 아니라 '민주'이다. 경제적 자립-정치적 자립-민주 복지 사회 구현으로 연결되는 구조이며, '민주'가 곧 '복지사회' 건설의 원동력임을 강조하고 있다.

중시기(72) 이전 『한양』에서 '통일'은 최종심급이 아니었다.[76] 앞의 인용문에서 본 '자주' '자립'도 '통일'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기보다 '민주' '발전'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는 60년대의 가장 대표적인 잡지 『사상계』『청맥』과 다른 지점이다. 제1계보인 『사상계』의 최종심급은 '반공'이었으며, 제5계보에 속하는 『청맥』의 최종심급은 '통일'이었다.[77] 『청맥』이 '탈냉전-통일'의 방법론이었다면, 『한양』의 방법론은 '탈식민'의 기치 아래 '자립'과 '민주' '발전'을 도모하는 방법

(25호, 1964.3) 「한국적 자유의 진단」(21호, 1963.11), 「자립경제와 구조문제」(23호, 1964.1), 「외래사조와 주체성」, (1964.12), 특집 「역사와 주체」(39호, 1965.5), 특집 「자립경제 건설을 위하여」(41호, 1965.7), 특집, 「자유화 현실화」(52호, 1966.6), 특집 『민족 주체의 반성」, 「경제의 자립 근대화 자유화」(이상 61호, 1967.3), 「민족주체성의 의미」(1970.4·5), 「민주주의의 요체」(1971.4.5), 「자유의 재인식」(1972.8.9), 등 거의 매호에 걸쳐 다루고 있다.

76 『한양』에서 '통일' 용어가 논제로 등장한 것은 78호(68.8)가 처음이다. 96호(70.8.9)의 특집, 103호(71.10.11)에서는 특집과 좌담회, 108호(72.8.9)에서는 전호가 통일 특집으로 기획된다. 즉 『한양』에서 최종심급이 '통일'로 설정되는 것은 중시기 구분점인 72년 전후가 된다. 반봉건, 반외세, 반독재, 반매판에 '통일' 문제가 본격적으로 추가되며, 아울러 '자유' 개념도 변화를 이룬다. 즉 '자주적 국가 건설'이 우선이 아니고, '자주적 평화통일 건설'이 실천되어야만 '진정한 자유'가 획득될 수 있다고 언급된다.(박병근, 「자유의 재인식」, 『한양』 제108호, 1972.8·9, 122쪽). 중시기 이후에는 통일이 최종심급이 된다는 점에서 제6계보인 『한양』과 제5계보인 『청맥』은 방법론 상 공통점을 지니게 된다.

77 다음의 논문 참조. 김복순, 「학술교양의 사상형식과 '반공-로컬 냉전지(知)의 젠더—1950년대 『사상계』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2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73-125쪽.; 김복순, 「『사상계』 기행문에 나타난 아시아 리저널리즘의 재편양상과 재건의 젠더」, 『여성문학연구』 제3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217-260쪽.; 김복순, 「『사상계』의 「움직이는 세계」에 나타난 리저널리즘의 계보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젠더」,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88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20, 93-137쪽.; 김복순, 「『청맥』에 나타난 리저널리즘의 탈냉전지(知)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젠더-특집 및 권두언을 중심으로」, 앞의 글, 225-270쪽.; 김복순, 「『청맥』에 나타난 리저널리즘의 탈냉전지(知)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젠더 2-문학비평을 중심으로」, 앞의 글, 294-339쪽, 참조.

론이었다.

『한양』에서 '복지'는 '경제'보다 '정치'와 연관된 개념이다. 함원태는 '진정한 복지사회란 주체와 객체가 통일된 사회', '인류사회에 기여 보익할 민족문화가 활짝 꽃이 필 사회,' '휴머니티가 고도로 발양되는' 사회라면서, 복지사회의 요건으로 4가지를 든다. 조국의 강토를 지키는 것, 나라의 주인 노릇을 똑똑히 하는 것, 자주 자활, 내 것으로 꾸리는 것[78]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지사회란 단순히 발전이 성취된 사회라기보다, 3자-4반이 달성된 이상적인 복지사회(국가)에 속한다.

『사상계』(제1계보)가 반공을 최종심급으로 하면서 빵의 문제를 요구했고, 『청맥』(제5계보)이 '빵과 자유'를 동시에 요청하면서 발전의 목적으로 '자유의 신장'을 역설했다면, 『한양』은 빵과 자유가 동시적으로 쟁취되는 것이 아니고 빵의 문제가 '먼저' 자립적·자주적으로 해결될 때, 자유·민주·복지가 순차적으로 담보되는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한양』은 '외세의존적 빵'에서 '진정한 자유'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외세의존적 성격을 전면 거부한 특징을 드러내며, '진정한 자유'에 기반하지 않는 『사상계』의 '냉전 자유주의' 및 5.16 쿠데타 정권에서의 예상되는 독재,[79] '좌우 양쪽의 전체주의'를 모두 부정했다. 아시아·아프리카의 '새로운 민주주의를 빙자한 독재', '자유의 지연 또는 반환으로서의 발전'을 모두 비판한 것이다. 『한양』은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신식민주의적, 제국주의적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박정희 정권의 민족적 민주주의와 다른, 자주·자립적 민족주의를 천명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양상은 아시아 리저널리즘의 기존 계보와 다른 것으로서, 세계자본주의체제 하 선진국 일본에서의 '자이니치 디아스포라'이기에 가능한 것이었

78 함원태, 「복지사회론」, 『한양』 제36호, 1965.2, 10-11쪽.

79 민정 이양을 강력히 촉구했던 이유이기도 했다. 『한양』은 반독재, 반부패의 측면에서 5.16을 지지했지만, 민정으로의 이양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63년 12월호까지 속표지에 「혁명공약」6조를 계속 게재했지만, 군정 정권이 확실시된 63년 10월 15일의 제5대 대통령 선거 이후, 64년 1월호부터는 속표지에서 '혁명공약'이 삭제되고, 『한양』의 논조도 첨예하게 비판적으로 돌아선다.

다. 이미 일본은 패망했음에도 한국전쟁 특수 등으로 제2의 발전을 구가하고 있었던 바, 자이니치는 '발전'에 대한 나름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반둥회의 참가자국들의 독재로의 배신 및 '국가'상(像)에 대한 디아스포라의 위기의식이 작동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내의 미군정 후 강한 '탈식민' 인식이 어우러져 이와 같은 논리를 구상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제6계보의 논리는 당시 한국의 제반 상황과는 거리가 좀 있었고, 또 이미 '발전의 역설'로 지적되듯이 트랜스내셔널/로컬이 구조화된 세계자본주의체제 하에서 아무리 '민주-복지'를 구현해도 앞선 선진국으로부터의 완벽한 자립, 진정한 자주의 실현이란 그 한계가 이미 노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한양』이 4.19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4.19 정신이 한국의 지향점일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자이니치 디아스포라'의 민족주체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창간 50호 기념호에서는 「4.19의 교훈」이라는 제목 하에 '교포학생 좌담회'를 마련하는데, 이 좌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나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므로 4.19 이전에는 자기가 한국인이면서도 한국을 제3자적으로 보는 그런 인식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것이 4.19의 기념 식전에 나가 한학동 위원장의 말을 듣는 사이에 자기의 인식부정을 통감했으며, 나도 학생으로서 4.19의 정신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강동준)[80]

학생들은 '조국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인순), '민족주체성의 확립이 고창되기 시작하였다' '자기민족이란 것과 분리돼서는 살 수 없다'(배경륭)고 언급하면서 4.19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으며, 특히 김인순은 대학에 입학할 때는 일본명(통명)을 썼으나 4.19 이후 정식으로 본명을 쓰게 되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지점은 이들로 하여금 4.19에 주목하도록 이끈 대상이 한학동이었다는 점이다. 배경륭이 증언한 바와 같이 한학동은 자

80 교포학생 좌담회, 「4.19의 교훈」, 『한양』 제50호, 1966.4, 178-182쪽.

이니치 2세대들이 민족적 자각과 민족적 주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4.19 기념식전'을 만들어 자이니치 2세대를 교육하고 있었으며, 본국 학생까지 초청해 강연을 듣는 등 상호소통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 좌담회는 한국적인 민족주의, 민주주의의 발현, 민족적 자주에의 모색을 강조하면서 각 계층에 걸치는 민족주체세력을 '육성'·'결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그를 위해 한학동과 한청동의 역할이 매우 긴요하다고 역설한다. 『한양』의 잡지발간 기획이 이러한 육성 및 결합, 즉 본국과의 연대가 중요 동인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은 젠더 관련 언급이다. 해방후 미소 신탁통치에 대해 『한양』은 성적 은유로 비판한다.

> 사실상 이 땅에 달라진 것이라곤 허리에 일본도를 길게 찬 일본헌병 대신에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로 교체되었다는 사실 밖엔 아무것도 없었다. 말하자면 우리는 지독한 하나의 상전을 보내고 극적인 두사람의 감시병을 맞이한 셈이었다. 말할 것도 없이 자애와 우애의 손을 내밀며 우리 민족의 자유와 평화를 보장해 준다던 두 감시병에 의해 우리의 국토 분단은 타율적으로 주어졌다. 그것은 비인도적인 처사였고 국제적 정의를 윤락시키는 반역사적 폭행이었다.[81]

미국과 소련의 신탁통치에 대해 '국제적 정의를 윤락시키는 폭행'이라 언급하는 바, 미·소/한국=식민/피식민=남자/여자로 비유되어 있으며, 강/약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여기서 한국은 윤락당하는 타자(대상)로 인식되어 있다. 이는 피식민을 '여성화의 과정' 및 '남성성의 박탈'로 형상화 하는 가부장적 방법이다. 피식민 또는 민족분단을 여성에 대한 '강간' '성폭행' '수난' '훼손' 등으로 형상화하는 전형적인 '성적 은유' 방식으로서, 훼손된 여성과 이를 회복하는 남성 구도가 내재되어 있다. 필자인 김질락은 60년대의 대표적인 대항공론장이었던 『청맥』의 편집인인 바, 60년대 진보적 잡지에서도 이러한 통상적 방법을 구사하고 있을 정도로 젠더인식은 강고한 것이었다.

---

81 김질락, 「민족주체성의 확립」, 『한양』 제50호, 1966.4, 32쪽.

반면 아래의 인용문에서는 여성을 시민으로 설정하면서, 4.19의 주체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한양』에서는 『청맥』과 달리 전반적으로 '민중'보다 '시민'을 주체로 설정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을 '시민'으로, 4.19의 '주체'로 적극 호명하는 특징이 발견된다. '수천 남녀시민'이 대열에 참가했다고 하면서도 특히 '여성 주체들'을 적극 호명해 내고 있다.

> 시민들도 격노하였다. 부인들이 돌을 치마에 쌌다. (…) 여학생들은 바케츠에 냉수를 떠다 데모대에게 주었다. (…) 50 가까운 부인들의 일단도 주먹을 하늘높이 쳐들고 나섰다. (…) 그때 마침 한 소복 여인은 전차 위에까지 기어올라 소리높이 만세를 부르짖었다. 이것을 계기로 데모대는 전차에 뛰어 올라 그것을 탈환하였다.[82]
>
> (밑줄은 필자가 강조)

여기서는 4.19의 주체를 '학생과 시민'으로 범주화 하면서, 시민의 범주 중 남성보다 여성을 더 적극적으로 호명해 낸다. 그간 '학생'은 '후진국 탈피의 역사적 담당자'[83]로서 흔히 호명되어 왔지만, '여성'을 3자-4반 이념의 담당자로 인식한 경우는 드물었다. 여기서는 여성을 혁명 주체로 설정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여성을 혁명의 '질적 변환의 계기'로까지 위치시킨다. 정영훈은 우리 역사에서 4.19가 민주주의를 위한 커다란 전환점이었다고 설명하면서, 그 대상으로 '여성 시민'을 위치시키는 것이다. 60년대 국내 잡지의 경우 주로 '어머니' '주부' '여대생'이 1차 소환대상이었다면,[84] 여기서는 '어머니'가 중점적으로 소환되기보다, 부인들, 여학생, 소복여인, 언니 등 즉 '여성군'으로 호명되면서 '어머니-중심성'에서 벗어난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제국-식민지에 봉사하는 젠더화된 조선인 표상으로서의 '오모니'[85]와도 세대론적으로 결별하는 것이다.

---

82 정영훈, 권두언 「4.19를 회상하여」, 앞의 글, 2-5쪽.

83 위의 글, 7쪽.

84 김복순,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여성문학연구』 제1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7-60쪽, 참조.

85 정호석, 「전후를 사는 '오모니'」, 한영혜·김인수·정호석, 앞의 책, 199쪽.

이는 앞서 1절에서 검토한 '이향민 남성'의 '횃불' '대변인'이라는 젠더인식과 견주어 볼 필요가 있다. 즉 '자이니치 디아스포라 민족주의'의 '대표자'는 '남성(성)'으로, 그 수행자는 '여성(성)'으로 설정하는 것으로서, 대표자-수행자라는 모종의 위계관계를 드러낸다. '행동하는 여성' 주체성은 확보되었지만, 여전히 가부장적인 위계적 권력관계가 교묘하게 재생산되고 유지되는 한계가 목도된다. 『청맥』(제5계보)의 선진성[86]과 비교되는 부분이지만, 여성군을 3자-4반의 실천자로 설정한 것은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

2.3 경제적 민족주의와 '가족-국가'의 비유

『한양』의 최종심급인 '민주-복지'의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한양』이 한국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책으로 제시한 것은 중농주의[87]가 아니었다. 동시대의 『사상계』나 『청맥』에 비해 농촌이나 농업 관련 기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농업을 공업과 더불어 '2대 경제 부문'으로 평등하게 설정하거나,[88] 공업화를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위치시켰다.[89] 60년 당시 농가비율이 64.9%이고 농산물 비중이 38%인 시점에서 농업을 도외시하거나 희생시키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았다. 이는 『한양』의 주 경제 필진인 김경진, 김기심, 박영철, 임경암 등 대부분의 필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입장이다. 이들은 농업을 근대화의 사각대지로 놓거나,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에서처럼 농민(업)을 희생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공업화를 위해 농업발전이 '먼저' 또는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86 여성적 관점의 선진성은 『청맥』이 압도적이다. 특히 조동일의 경우가 그러하다. 김복순, 「『청맥』에 나타난 리저널리즘의 탈냉전지(知)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젠더 2-문학비평을 중심으로」, 앞의 글, 참고.

87 고명철은 『한양』이 농업의 근대화를 통해 주체적 근대화 기획을 달성하고자 했다면서, 이를 중농주의에 초점을 둔 근대화라 보았다. 고명철, 「민족의 주체적 근대화를 향한 『한양』의 진보적 비평정신」, 『영구혁명의 문학들』, 국학자료원, 2012, 84-85쪽.

88 김경진, 「혁명정부의 중농정책」, 『한양』 제7호, 1962.9, 26쪽.

89 이태용, 「한국경제의 공업화와 자립경제」, 『한양』 제7호, 1962.9, 18-28쪽.

> 후진성 탈피와 관련하여 (…) 농업이 반드시 선도적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 (…) 농업이나 기타만으로는 후진성 극복을 도모하기 힘들며, 공업화의 방도가 강구되어야 한다.[90]

> 현하 한국경제가 직면한 초미의 급무는 혹심한 대외의존성에서 해탈하고 공고한 자주경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 중공업을 근간으로 하는 민족공업의 건설에 의해서만 이룩될 수 있다. (…) 자립적 민족 공업은 나라의 경제자립의 토대이며, 자주정치의 초석이다.[91]

이처럼 중농주의라 보기 어려우며, 민족주체적 입장에서 경제론을 제시하면서 자립경제를 중시한다. 자립경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국자본에 대한 예속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양』의 논자들은 이승만, 박정희 정권처럼 '외자'나 '차관'이 한국경제를 근대화 시키지도 국민생활을 개선시키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였다[92]고 역설한다. 원조나 차관도 선진국들이 자국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경제적 요구로서 실행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일갈한다.[93]

> 미국의 대외원조는 미국의 상품수출의 증가와 수입원료의 공급을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독점자본가들의 이윤추구의 중요수단으로 되고 있으며, 외국경제를 미국경제에 종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 매판자본가들은 미국원조에 의하여 육성되었고 오늘과 같이 비대하여졌다.[94]

---

90 오윤식, 「후진국 개발론과 현실」, 『한양』 제37호, 1965.3, 145쪽. 특집 「한국경제의 좌표」에 발표된 논문이다.

91 이종순, 「민족공업의 건설과 자연부원」, 『한양』 제25호, 1964.3, 108쪽.

92 김경진, 「자주적인 자립경제 확립의 길」, 『한양』 제17호, 1963.7, 9쪽.

93 오윤식, 앞의 글, 147쪽.

94 김경진, 「자주적인 자립경제 확립의 길」, 앞의 글, 10쪽.

『한양』은 한결같이 '반자립적' '원조의존' 정책에서도 벗어나야[95] 후진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원조란 원래 원조제공국의 정치적 경제적 의도를 농후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서 수원국(受援國)의 자체발전과는 모순되기 때문에, 후진국의 경제개발이 외국의 원조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론은 원조제공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론이라는 것이다. 즉 자립경제 확립과 외국원조와는 '상호배리'되는 개념임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자립경제를 수립하자면 자기 힘으로 자국내에 있는 자연부원과 노동력을 이용하여 산업을 건설하며 국내생산품으로 국내수요를 기본상 충족시켜야 한다.[96]

『한양』은 혁명정부의 정책이 그 이전의 17년보다 더 나빴다고 진단한다. 수출입국론(輸出立國論)은 영국의 자본주의 발전은 촉구했을지 모르지만, 한국의 경우 경제구조의 파행성이 많이 남아 있고 기술적 낙후성이 농후한 후진국이기 때문에 '환상 이상의 무리감'[97] '현실성의 뒷받침이 없는 허론'[98]을 짙게 할 뿐이라 주장하였다. 즉 스미스 또는 리카르도가 주장하는 수출입국론은 한국에 적합지 않다.

> 국민경제의 자립적 발전은 수출제일주의 즉 수출입국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의거하여 국내부원을 개발하려는 자주정신에 있다고 할 수 있다.[99]

> 한국과 같은 경제구조 위에서 수출을 강행하는 것은 거시적 태도가 아니며 국민-민족경제 발전의 견지에 선 입장이 아니라는 점일 것이다.[100]

여기서는 수출이 증대될수록 오히려 외환위기를 맞게 되는 역설적이고 이율배반

95 김기심, 「한국적 후진성의 특성」, 『한양』 제20호, 1963.10, 100쪽.
96 김경진, 앞의 글, 13쪽.
97 김경진, 「수출입국론을 논함」, 『한양』 제97호, 1970.10·11호, 28쪽.
98 위의 글, 34쪽.
99 김경진, 앞의 글, 34쪽.
100 김기심, 「한국의 수출진흥책과 외환위기」, 『한양』 제91호, 1969. 10·11호, 44-52쪽.

적인 현상에 대해 분석하면서, 국민경제에 바탕을 둔, 내수 증대에 기초한 자립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한국무역의 비자주성이 해소될 수 있다고 피력한다. 즉 박정희 정권의 수출 위주의 정책의 한계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양』의 경제개발론은 수출입국론을 강조하는 박정희 정권 및 『청맥』의 경제정책과 결정적으로 갈라진다. 박정희 정권은 '내포적 공업화'를 강조했고 『청맥』은 '자주적인 내포적 공업화'[101]를 주장했는데, 두 경우 모두 '수출' 중심 이론이라는 점에서 『한양』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위에서 검토한 바, 『한양』의 경제발전론은 '경제적 민족주의'[102]로 불릴 만큼 자주, 자립정신에 철저히 기초하고 있으며, '농업' 등의 특정 부문을 희생시키지 않고 균형적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내수 증대'를 강조하는 '수출입국론 거부', 농업 및 제반 공업분야의 균형발전을 주장하는 '복합경제론'이라 말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 다루겠지만, 『한양』은 '후진국을 단순한 자본부족 국가로 보아서는 곤란하다' '후진국 개발론에 대해서도 주체적 입장에서 대해야 할 것'[103]이라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열등론에서 벗어나 있으며, 후진성을 초래한 정치 경제 문화적 요인들의 연관성에 주목하면서 정치적 자주의 문제와 경제적 자립을 연결지어 사고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 내용은 다음 절에서 구체화된다.

한가지 더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한양』이 '자립경제 확립'의 문제를 '자수성가'에 비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 자수성가란 말도 있거니와 집을 잘 거두고 그런 속에서 힘을 들여 세간을 꾸리는 사람은 그 속에서 앞날의 희망과 행복을 찾고 근로하는 기쁨을 느끼며 자손들의 장래를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

101 김복순, 「『청맥』에 나타난 리저널리즘의 탈냉전지(知)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젠더-특집 및 권두언을 중심으로」, 앞의 글, 248-254쪽, 참조.
102 오윤식, 「후진국과 경제적 민족주의」, 『한양』 제70호, 1967.12, 참조.
103 오윤식, 「후진국 개발론과 한국」, 『한양』 제37호, 1965.3, 149쪽.

이다. 나라의 부와 장래는 결코 남의 힘에 의해서 보장될 수 없다.[104]

여기서는 가족과 국가가 동일시되고 있으며, 이 때의 가족은 가부장적 구조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한양』의 경제개발론은 남성젠더적이다. 국가는 '가장'의 이미지로 묘사되어 있으며, '가부장적 가족의 회복'이 '민족국가의 수립'으로 비유되어 있다. 식민 외세의 억압과 민족적 자립이 '가족국가'라는 정치적 코드로 재구성되어 있다. 이상적인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잘 따르는 자손이 되는 것이 근대 민족국가를 수립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자부(慈父) 효자(孝子)라는 유교적 남성성에 기초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창간호 「편집후기」에서부터 확인되는 양상이다. 『한양』을 자기의 '아들'과 '동생'과 같이 아끼고 사랑해 달라는 부탁의 말이 실려 있다. 국가-사회를 가장으로 간주하면서 『한양』을 그 보살핌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잡지에 대한 인정투쟁을 그 잡지의 사상 및 방법의 차이로 사유하기보다 '가족'에 비유해 사유하는 것으로 가족-사회·국가의 유비관계가 깊이 노정되어 있다.

2.4 내재적 발전론의 '선도': 비주체적 여성

3자-4반 이념 및 경제적 민족주의론은 필연적으로 내재적 발전론과 이어지게 되면서 '한국적인 것'을 재구성하게 만든다. 3자-4반 이념은 우선 무엇보다도 『한양』으로 하여금 '우리'의 것, '한국적인 것'을 바로 인식할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사대주의론을 배격하게 만들었다. 이는 창간사에서부터 강조된다.

> 우리의 과거를 알고 우리의 오늘을 알고 우리의 내일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이다. 조국을 알기 위해서이다. 잡지 『한양』은 (…) 조국의 현실을 살펴 국가백년대계를 이를 힘찬 재건에 이바지할 것이다.[105]

---

104 김경진, 「자주적 자립경제 확립의 길」, 앞의 글, 6쪽.
105 「창간사」, 『한양』 창간호, 1962.3, 9쪽.

> 사회(강태욱): 재일교포의 거의가 자기나라의 역사라든가 민족문화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또 안다 해도 그것이 아주 의곡된 지식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106]

『한양』이 문화유산 및 삼천리 강토를 세세하게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위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한국의 명승순례」, 「한국의 고적 순례」, 「한국의 사찰」, 「민요와 전설」, 사과 담배 등의 「한국의 名産」, 「한국인물열전」, 「한국음식」, 「한국공예」 등 한국의 민속, 문화, 자연, 강토 등을 소개하고 분석하면서, 주체적 입장에서 조국을, 자신을 제대로 알고자 기획하였다. 그중 특히 우수한 것은 「그라비아」란에서 사진으로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홍직은 '고유문화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는 곧 어떠한 근거에 입각해서 평가하겠느냐 하는' 관점(스탠드 포인트)의 문제라면서[107] 후진성, 열등성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재해석할 것을 요구한다. 『한양』의 위와 같은 기획들은 단순한 복고취미나 회고취향이 아니라, '다른 아시아-한국'을 설정하는 일련의 '재해석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찬란한 문화의 고유와 전통과 유산을 비판적으로 섭취 계승하여 그것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바르게 발전시킨다는 것 이외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에겐 반드시 비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오프트믹한 전망이 허락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108]

랑케(Ranke)적인 것이 실증적 문헌고증학적인 것이라면 부르크하르트(Burckhardt)적인 것은 문화사학적인 것을 의미한다. 강태욱은 랑케와 부르크하르트를 분리했지만, 학계에 의하면 문화사학의 분류에 둘다 편입시키기도 한다. 광의/협의의 문화사학 분류로서, 랑케가 광의의 문화사학 범주에서 '정치사' 연구 및 국민국가 형성에 복무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라면, 부르크하르트는 협의의 '문화'

106 좌담회 「좌담회-민족문화와 문화유산」, 창간호, 1962.3, 64쪽.
107 위의 글, 65쪽.
108 위의 글, 73-74쪽.

에 주목한다고 본다.[109] 부르크하르트는 역사의 진보 및 헤겔류의 목적론적 파악을 부정하면서, 과거의 역사를 민족국가 형성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을 거부한다. 대신 그는 역사 속에서 지속되고 있는 동일한 것, 항시적인 것이 유형적 반복적으로 전개되는 현상이 바로 역사의 본체적인 모습이라고 판단했으며, 인간, 인간적인 것, 인간성이야말로 역사의 본체이자 내용이라고 보았다.[110] 사회자 강태욱은 부르크하르트의 문화사적 관점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거칠게 말하자면, 부르크하르트의 관점에 설 때 '열등' '후진' '정체' 등의 개념들은 그 의미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조선의 열등성, 미개, 야만 등으로 평가되었던 것은 단지 조선적인 것, 조선의 고유한 개성적인 것일 뿐이며, 일본의 우월성 요소들도 단지 일본의 고유한 개성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낙관적 전망이 있다'는 사회자 강태욱의 말은 이러한 맥락에서 긍정성을 획득하게 된다.[111]

『한양』은 부르크하르트의 문화사적 관점을 수용했지만, 전면적으로 그의 이론에 몰입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진단된다. 역사를 '문화과정으로서의 가치'로 인식하려 한 점은 부르크하르트적이지만, 역사의 진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사회경제적' 관점도 도입하고 있다.[112]

이와 같은 입장에서 『한양』은 한국이 유구한 역사적 측면, 경제면, 문화면, 국토의 크기, 인구수의 여러 측면에서[113]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으며, 강약약강의 허약한 민족성을 지닌 불패비도(不敗非道)의 악질적 행동을 일삼는 민족이 아

109 조성을, 「일본의 문화사학과 한국의 문화사학」, 『한국사상사학』 제24집, 한국사상사학회, 2005, 472-473쪽. 이 연구에 의하면 해방 후 남한 학계에서의 한국사 연구의 주류는 문화사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라고 한다.

110 이상신, 「부르크하르트의 문화사의 과제」, 『서양사론』 제69호, 한국서양사학회, 2001, 5-34쪽.

111 부르크하르트에게 문화란 가치이자 자유였으며, 이 자유는 내면적인 정신의 자유였다. 그는 각 나라의 전통과 질서에 '문화과정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했으며, 세계사를 보편사적으로 관조했다. 그가 부정한 것은 직선적인 발전단계론이었고, 역사의 유형적 반복적 진행은 교양화/야만화의 과정으로 파악했다. 이상신, 앞의 글, 참조.

112 에베하르트 고타인은 부르크하르트를 계승하면서도 사회경제사 관계도 관찰함으로써 연구의 영역을 넓혔는데, 정치사를 보다 강조하는 신 랑케 학파와 여러 차례 논쟁하게 된다. 조성을, 앞의 글, 참조.

113 강영준, 「사대주의론」, 『한양』 제6호, 1962.8, 13쪽.

니었다고 강조한다. '자연부원(自然富源)'이 넘치는 나라였으며, 소국이지만 약한 나라가 아니라면서 '아시아적 정체성'을 부정한다. 즉 한국은 몇 년천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지닌 나라였다. 「한국의 자연부원」 코너를 창간호부터 연재하면서[114], 수력에너지자원(3호), 석탄에너지자원(4호), 수산자원(5호), 비금속자원(6호), 동식물자원(8호) 등을 점검한다.

> 현존하는 경주의 첨성대 (…) 등은 오늘 세계의 미술평론가들의 심금을 격동시키고 있다 (…) 이러한 찬란한 과학문화의 성과들은 모두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정신에 의하여 움직일 때 달성한 것이며 또한 세상에 사대주의 풍조가 휩쓸 때에도 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적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신의 슬기로운 지혜와 정열을 발휘한 결과 이루어진 고귀한 산물이다.[115]

한국은 흔히 타율성론, 당파성론, 문화적 독창성 결여, 사대주의론 등을 구성하는, 즉 아시아적 정체성 요소인 여타의 '결여들'을 보유한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나라가 '아님'을 목청 높여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자립자주의식을 천명하지 못하여 숙명론으로 떨어지면서 약육강식을 인정하고 식민지화를 인정하게 되었으며, 노예근성에 절어 자기민족과 문화를 비하하고 천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양』은 이를 고려중기 이후에 행해진 유교교육이 강화된 결과, 즉 사대주의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유교의 대의명분 사상, 삼강오륜, 지배 피지배 관계를 하늘의 법으로 인지하는 등 사대주의의 해독성을 강하게 질책한다.

이러한 관점은 미국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 4반 중 반외세에서 강조했던 바 '타율성론'을 거부하면서 침략성을 담지한 그 어떤 외국 세력 뿐 아니라 우방인 미국과 관련해서도 주체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한양』은 미국과의 관계도 '종미(從美)'로 귀결될 경우 사대주의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면서 거부하기에 이른다.

---

114 1-2호는 총론격에 해당한다.

115 강영준, 「사대주의론」, 앞의 글, 7쪽.

> 6.25 동란을 치룬 한국으로 볼 때 물론 자유우방 특히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무시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 한국의 운명이 전혀 미국에 의존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무슨 독립이고 자립이라고 하겠는가? (…) 우방이라는 것도 서로 입장이 대등해야 하고 크고 작은 나라의 구별은 있으나 상호평등하여야 한다.[116]

> 미국 일본이 자유 우방이지만 운명공동체는 아니다. (…) 우리의 운명공동체는 우리 민족이 있을 뿐이다.[117]

『청맥』과 마찬가지로 『한양』에서도 우방에 대한 『사상계』 등의 관점이 수정된다. 이러한 주체적 근대화론의 관점에서 『한양』은 실학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시작한다. 실학은 자주 자립의 실사구시 학문[118]이기 때문이다. 5호에서부터 홍대용, 박지원을 소개하고 있으며, 「다산 정약용」(9호), 「실학의 선구자 이수광」(11호), 「실학파의 자립정신」(16호), 「초정 박제가의 북학의」(19호), 「실학파의 경세제민 사랑」(20호), 「실학파의 민본사상」(22호), 「유형원의 민본사상」(24호), 「실학파의 문화주체사상」(25호), 「박세당과 사변록」(26호), 「실학파의 전제개혁론」(27호), 「실학파의 교육사상」(29호), 「실학과 실학파의 재고(再考)」(97호) 등 실학 관련 내용을 거의 매호 싣고 있다. 『사상계』나 『청맥』이 서너편의 실학 관련 글을 싣고 있음과 비교해 볼 때[119] 이는 『한양』의 핵심적 차이이다.

---

116 위의 글, 11-12쪽.

117 함원태, 「우리의 길을 찾자」, 『한양』 제70호, 1967.12, 22-23쪽.

118 강영준, 「사대주의론」, 앞의 글, 10쪽.

119 『사상계』에서는 1963.2. 「한국사를 보는 눈」이란 특집을 마련하며, 157호(66.3) 별책부록으로 「한국사상」에 대해 천착하는 가운데 실학을 언급한다. '실학'이라는 구체적 분야로 접근하기보다 한국사, 한국사상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청맥』에서도 22호(66.10) 「읽어야 할 실학의 고전」이란 글이 '실학'이란 용어로 마련된 글에 불과했다. 51년 창립된 역사학회의 잡지 『역사학보』에는 50-60년대를 통틀어 '실학'이란 제목의 글이 게재된 바 없다. 『역사학보』는 창간호에 「반계 유형원 연구 상·하」를 게재하고 시대구분론 관련 논문을 2-4편 실었을 뿐이다. 반면 진단학회에서는 58년 특집으로 실학 개념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66년 창간된 『창작과 비평』은 6호부터 「실학의 고전」이란 연재

> 실학파는 (…) 사대주의, 민족허무사상을 반대하고 자립정신에 의하여 모든 것을 해나가자는 학파이었다 (…) 자립정신을 발양하여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그를 실용에 적용해 나간다면, (…) .후진한 이 나라를 급속히 부유한 국가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120]

『한양』의 실학 이해는 '자생·자결의 원칙'으로 문화주체를 확립하여[121], 여타의 아시아와 다른 '한국적인 것'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이며, 주체적 근대화론 및 내재적 발전론과 연결된다. 실학은 내재적 발전론, 아시아적 정체성 부정, 주체적 근대화론을 떠받치는 중요한 축이라 할 수 있다. 50년대 이후의 실학 연구에서는 해방전 제국주의 사학에서의 실학연구의 외인론[122]을 부정하면서 실학이 근대적인 사상으로 발전하는 가능성의 계기를 지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학은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로부터의 발전'에 초점을 맞춘 한계는 있으나,[123] 식민사관 극복과 관련하여 당대로서는 일대의 전환을 꾀하는 획기적인 관점이었다.

이전까지 금기시되었던 민족문제가 4.19 이후 정면으로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종래의 한국사관 및 한국사상에 대해 반성이 요청된다. 즉 타율성론 및 정체성론이 정면에서 비판되기 시작했는데,[124] 『한양』은 『사상계』나 『청맥』보다 '먼저', 그리고 '더 강력하게', 창간때부터 '마치 사시(社是)처럼' 주체적 근대화론 및 내재적 발전론을 주창하고 있었으며, 이는 일본 및 북한학계와 비교해도 거의 동시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선구적인 것이었다.

북한학계에서는 50년대부터 실학 논의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으며 62년

물을 10회에 걸쳐 싣는다. 이는 각 잡지가 실학의 구체적 내용 및 전망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한양』과 비교되는 지점이다.

120 유영묵, 「실학파의 자립정신」, 『한양』 제16호, 1963.6, 24-26쪽.

121 유영묵, 「실학파의 문화주체사상」 『한양』 제25호, 1964.4, 64-69쪽.

122 해방전의 제국주의 역사학에 의한 실학 연구에서는 실학이 청의 실사구시 학풍, 지나사상 등에 원천을 두고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정창렬, 『민중의 성장과 실학』, 선인, 2014, 440-444쪽.

123 조성을, 「조선후기 실학의 근대성에 대하여」, 『역사비평』 제13호, 역사비평사, 1990, 387쪽.

124 정창렬, 앞의 책, 446쪽.

다산 탄생(1762) 200주년을 기념하여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125] 국내에서도 이기백에 의해 『국사신론』(1961)이 출간되는가 하면 김용섭의 「일제 관학자들의 한국사관-일본인은 한국사를 어떻게 보아 왔는가」라는 논문[126]이 『사상계』 63년 2월호(「한국사상」 특집란)에 게재되고 일본에 번역되면서 한국학 연구 방법과 관련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일본에서도 이미 하타다 다카시(旗田 巍),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 등에 의해 식민사관에 입각한 조선사 연구에 대한 반성이 일기 시작한다. 하타다의 『조선사』(1951), 『일본인의 조선관』(1969) 및 일본조선연구소 주최로 심포지움이 열리기도 했다(1962년-64년). 주제는 '일본에서의 조선 연구의 축적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10회)였다.[127]

국내에서는 하타다의 발전된 인식을 수용한 김용덕의 『국사개설』(1958)」이 나왔지만,[128] 일본 학계의 한국사 연구는 국내보다 한층 활발한 것이었다. 이미 가지무라가 50년대 후반부터 정체성론·타율성론을 비판하면서 내재적 발전론을 강하게 추동하고 있었고, 이는 『조선에서의 자본주의의 형성과 그 전개』(1977)로 이어진다. 내재적 발전론이란 '내부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및 역사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관점으로서,[129] 일본 당대의 요시노 마코토(吉野誠)에 따르자면 '타율적이 아니라 내재적으로, 정체적이 아니라 발전적으로 조선의 역사를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방법적 관점이다.[130] 이러한 새로운 연구는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반성, 50년대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의 진전, 한국의 4.19 및 6.3에서의 한일투쟁의 고양 등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일련의 역동적인 흐름을 동력으로

125 김용섭, 「일본·한국에 있어서의 한국사서술」, 『역사학보』 제31집, 역사학회, 1966.8, 128-147쪽. 참조.

126 이 논문은 일본의 『조선연구월보』 제15호, 일본조선연구소, 일본 도쿄, 1963.3에 번역, 소개되었다.

127 하타다 다카시 편, 주미애 옮김, 『심포지엄 일본과 조선』, 소명출판, 2020, 1-636쪽, 참조.

128 조성을, 「제4장 한국 역사학의 발달」, 한국사학사학회 편, 『21세기 역사학의 길잡이』, 한국사학사학회 편, 경인문화사, 2008, 69쪽.

129 이경구, 「개념사와 내재적 발전: '실학' 개념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제213집, 역사학회, 2012.3, 50쪽.

130 강원봉 외, 『가지무라 히데키의 내재적 발전론을 다시 읽는다』, 아연출판부, 2018, 67-68쪽.

삼은 결과이다.

『한양』은 「대담 한국사연구의 자세」(55호, 66.9)에서 하타다와 편집인 김인재와의 단독 대담을 통해, 한국사 연구의 방향 및 '일본에서의 조선학 연구' 관련 문제를 제기한다. 하타다는 전후 최초의 한국사통사 연구서인 『조선사』(1951)를 통해 전전(戰前)의 한국사연구방법론을 비판했는데, '조선 민족'을 관점의 중심에 둔 새로운 방법으로 조선사 연구가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한국인을 주체'로 한 새로운 역사서술을 피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국내 학계에서는 '국내 역사학계의 일대 경종이 아닐 수 없다'[131], '새로운 내용 새로운 입장에서의 서술 때문에 일본학계 뿐만 아니라 한국학계에도 커다란 자극과 영향을 주었다[132]고 평가한 바 있다. '어떠한 사회에 어떠한 인간이 살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고민했는가 하는 것을 무시하고, 그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위치와 연대를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만 다룰 때, 그 학문은 '비인간적 학문', '인간 부재의 학문'이 된다고 반성하였다. 이런 이유로 전전의 조선사는 '조선인 부재, 인간 부재의 역사, 민중 부재의 역사'였다고 술회하면서,[133] 전후 일본에서 과거이자 현재이며, '내부이자 외부'인 재일한국인을 배치하고 한국 민족을 재구성해야 하며, 일본도 가해책임의 망각에서 벗어날 때 제대로 된 역사학을 서술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하타다가 '조선 민족'의 내재적 발전 관점을 견지하고 있었다면, 가지무라는 '조선 민중'의 내재적 발전 관점을 지니는[134] 차이가 있다.

「대담 한국사연구의 자세」에서 하타다는 한국사 연구가 일본의 과거 정치를 미화하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131 천관우, 「기전 외(旗田 巍) 저 『조선사』」, 『역사학보』 창간호, 역사학회, 1952.7, 128쪽.

132 김용섭, 「일본·한국에 있어서의 한국사서술」, 앞의 글, 143쪽.

133 박준형, 「하타다 다카시와 '전후 조선사학'의 가능성」, 『인문논총』 제74권 제4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 441-474쪽, 참조.; 미쓰이 다카시, 「전후 일본에서의 조선사학의 개시와 사학사 상(像)—1950-6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제 153집, 한국사연구회, 2011, 346쪽에서 재인용.

134 조성을, 「전후일본에서의 한국사 시대구분과 한국학계에의 영향」, 『한국사학사학보』 제11호, 한국사학사학회, 2005, 131쪽.

> 조선에는 훌륭한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일본이 침략했다는 것과 거기에 대한 부당한 저항이 있었다는 것이 현재의 조선을 만들어내는 근본이었다는 조선의 주체적인 면, 이것을 보지 않는다면 역시 과거의 낡은 조선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 한국인의 주체성을 세우고 역사학을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135]

하타다는 학문연구가 정치권력 및 종교와 거리를 두지 않을 경우 편견에 사로잡히기 마련이라면서, 현단계의 한국사 연구란 대국의식이나 우월감에서 벗어나야 하며, 사실 및 옳은 인식에 기초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하타다는 따라서 당대에 진행되고 있는 한일회담도 '반대'한다. '가장 중요한 점'에 해당하는, '일본의 과거의 지배사실에 대한 규명이 깊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일본인도 자신의 문제로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136]

하타다는 한국사학도 일본사학도 모두 식민사학을 벗어나야 함을 역설한다. 이는 일본도 한국도 과거를 망각하지 않고 직시하면서 반성하고 성찰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피력한다. 하타다는 피식민지인, 피지배민족 뿐만 아니라 식민지인, 지배민족도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137]임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138] 이러한 인식은 하타다의 '청산해야 할 빚'(account to settle)' 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타다의 아버지는 재조일본인이어서, 마산에서 태어난 하타다에게 피식민지 조선은 원체험을 이루어준 고향인 반면 일본은 오히려 낯선 외국이었고, 식민지 지배 및 경험, 감각, 감정 등으로부터 하타다는 한국인

---

135 「대담 한국사연구의 자세」, 『한양』 제55호, 1966.9, 118, 120쪽.

136 위의 글, 121쪽.

137 위의 글, 120쪽.

138 하타다는 『조선사』(1951)를 집필할 당시만 해도 전전 일본의 정체성론이나 타율사관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관점에 입각한 하타다의 주장은 봉건제 결여론과 맞닿아 있으며, 외세를 역사의 중요한 시기구분점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60년대 후반-70년대에 이르러 하타다는 자신의 관점 및 그 내용적 결함에 대해 반성하기에 이른다.(미쓰이 다카시, 「전후 일본에서의 조선사학의 개시와 사학사상—1950-6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제153집, 한국사연구회, 2011, 347쪽.). 본 대담이 행해진 66년은 이러한 반성이 이론적 뼈대를 이루어 가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에게 부채의식으로서 '청산해야 할 빚' 의식을 갖게 된다.[139]

한편 하타다의 『조선사』는 미국의 한국사 연구자인 라이샤워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하타다의 『조선사』는 *A History of Korea*로 번역되었는데, 당시 미국학계의 경우 식민통치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타다의 저서는 신선하고 객관성을 담보한 한국사 개설서로 평가되었다고 한다.[140] 라이샤워의 저서 『동아시아:위대한 전통(*East Asia:The Great Tradition*)(1960)』과 『동아시아:위대한 변용(*East Asia:The Great Transformation*)(1965)』[141]은 한국 부분에 대한 서술에서 상당수 하타다의 관점 및 내용을 그대로 참조하고 있다.[142] 반면 라이샤워의 글 「일본에 있어서의 국수주의와 군국주의의 발생」은 『역사학보』 제3집(1953.1)에 번역되어 있어, 당시 『한양』이 지향하는 바 '한국사학의 방법'이 한-미-일-자이니치라는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었는지를 가늠케 한다.

『한양』의 기획 결과, 향후 등장하게 될 새로운 한국사에서는 한국(인)의 패배주의 의식 및 열등감이 서술될 이유가 없으며, 일본/한국=선진/후진의 기계적 적용이 가능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주체적 근대화론 및 내재적 발전론은 남북한에서의 입론, 일본사학계의 반성, 자이니치 디아스포라의 관점 등이 어우러져 촉발해낸 새로운 관점이자 방법론이다. 이것이 『한양』이 하타다를 단독 대담자로 섭외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 대담은 식민사관 및 하타다 자신의 초기 관점에 대한 반성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있다. '자이니치 디아스포라'라는 『한양』의 '경계인' 측면은 이처럼 트랜스내셔널/로컬, 아(sub)트랜스내셔널/로컬의 관계망을 더욱 핍진하게 비춰주는 조건이자 공간이었다.

위와 같이 60년대 한국사 연구 방법론은 남북한 뿐만 아니라 일본 및 외국에서 역동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는데, 『한양』은 바로 이러한 비판적 검토가 본격

139 고길희, 『하타다 다카시』, 지식산업사, 2005, 18-19쪽.

140 위의 글, 101쪽.

141 『동아시아: 위대한 전통』은 『동양문화사 상』(을유문화사, 1964)으로, 『동아시아: 위대한 변용』은 『동양문화사 하』(을유문화사, 1969)로 각각 번역되었다.

142 배민재·정상우, 앞의 글, 101쪽.; 『동양문화사』 상, 서문에도 '지나칠 정도로 하타다 다카시의 『조선사』에 의지하였다'고 술회되어 있다. 장세진, 「라이샤워와 전후 미국의 지역연구」, 『숨겨진 미래』, 푸른역사, 2018, 224-269쪽.

적으로 시작되는 그 시기에, 그 지역 일본에서, '자이니치 디아스포라 민족주의'라는 다중적 시선으로 이를 재검토할 수 있었던 것이다. 주체적 근대화론, 내재적 발전론 등 한국학에 대한 새로운 연구 동향이 『한양』에서 거의 잡지의 '사시'로 제시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내재적 발전론을 비롯한 주체적 근대화론 및 한국학을 선도하는 『한양』의 위상은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잡지 가운데 『한양』과 같은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잡지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한양』은 높이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도 눈여겨 볼 지점은 『한양』이 개개의 특수성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내재적 발전론 '일반'은 일국사적 발전단계론을 보편화하는 입장이지만, 각국의 민족적 차이를 인정하면서 '특수성'의 범주로 위치시킬 경우, 일국사적 발전단계론은 상대화 된다. '일본사를 위한 한국사'에 초점을 맞추며 '아시아적 특질'에 집착한 전전의 일본에서와 달리, 『한양』은 '아시아적 특질'보다 '한국적 특질'을 강조한다. '유럽과 다른 아시아'라는 단위로 한국을 위치시키지 않고, 아시아 내의 '다른 아시아'로 '한국(인)'을 설정하는 것이다. '아시아'라는 범주에는 '식민국 일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아라는 범주로 묶을 수 없었던 것이다. 남북한 및 일본 사이에 '끼인 존재'인, 그리하여 다중적 시선을 확보할 수 있었던 '자이니치 디아스포라'로서는 어찌보면 필연적 귀결이었던 것이다.[143] 즉 내재적 발전론 '일반'이라는 세계사적 기본법칙에 입각하면서도 내재적 발전론의 '특수'를 설정함으로써 일국사적 발전단계론을 극복할 시야를 확보하고 발전의 '복수 경로'를 상정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선진/후진=우/열이라는 단순 이분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물론 내재적 발전론은 서구중심적 시각으로 자본주의의 맹아를 찾아 발전론을 완성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발전의 역설'로 비판

143 한국학의 계보와 관련하여, 자국학으로서의 한국학, 식민학으로서의 한국학, 민족학으로서의 한국학,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 등의 네 범주로 분류되기도 한다(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동아시아한국학의 분화와 계보』, 소명출판, 2013, 7-10쪽). 이 분류에 따르면 재일한국인에 의한 한국학은 민족학으로서의 한국학이고, 라이샤워 등의 한국학은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이다. 『한양』의 자이니치 디아스포라에 의한 한국학은 민족학, 식민학, 지역학의 계기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자국학으로서의 한국학'이라 할 수 있다.

된다. 또 내셔널리즘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점, 일국사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144]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년대의 내재적 발전론이 식민사관의 비판 및 주체적 근대화론에 미친 공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3자-4반 이념과 관련하여 비판되는 대상이 주로 '여성'이라는 점이다. 한국여성은 '자신의 경제학을 자신이 세워나가'[145]지 못하고 '성찰이 없다'(78쪽)고 진단된다. 또 프랑스제 화장품을 주로 애용할 정도로 사치에 물들어 있으며, 개방풍조로 인해 예전의 '정숙한 한국여성'을 보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위기의 수사학'을 동반하여 남성/여성=주체/비주체=생산/소비의 영역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가부장적 성적 은유에 머물러 있다. '소비 주체로서의 여성'에 대한 비판은 『사상계』나 『청맥』 뿐 아니라 60년대 전반에서 일관되게 드러났던 부분이다. 소비주의, 쾌락주의, 개인주의라는 서구적 가치로 민족이 오염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으로서, 이를 비판하기 위해 동원되는 것은 여성(성), 야성 이미지였다. 고유한 전통은 정절을 지키는 고결한 여성을 통해 언급되는 등 위기 때마다 여성(성)은 국가·사회와 연결되어 정절지키기의 존재로, 인내의 대상자로 자리매김되었다. 이는 민족·국가·사회·정치의 젠더가 남성젠더적임을 확인시킨다.

한편 일본에서 방송된 드라마 한 장면과 관련해, 방송에서 일본인 아내가 남편에게 '삼국인 닮았다'고 무심코 한 말이 전파를 타자, 이를 청취하던 한국인이 일상적 차별을 겪으면서 고통스러웠다는 한 사례를 제시한다. 여기서 아내/남편=잘못 아는 자/ 모욕해도 너그럽게 넘기는 자로 배치되어 있으며, 이 층위에 일본/한국=지배/피지배=농담/고통의 차별의 시선이 개입되어 있다. 소비의 주

144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비판은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자본주의 맹아론'의 부조성, 자의성을 지적하는 안병직·이영훈의 비판이 첫 번째 축이고, 민족주의와 근대에 기반한 전체주의적 일원주의적 경향이 짙다는 탈민족주의적 시각과 미국학계의 비판이 두 번째 축이며, 서양 근대의 과도한 적용이라는 비판이 세 번째 축이다. 박찬승, 「한국학 연구 패러다임을 둘러싼 논의-내재적 발전론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제35집,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2007, 30-46쪽.

145 「좌담회-학술강연회」를 마치고」, 『한양』 제6호, 1962.8, 79쪽.

체로서의 여성, 비성찰적 존재로서의 여성(성)의 함의가 배치되어 있고, 일본여성/한국여성, 일본/삼국인이라는 중층적 타자의 시선이 개입되어 있다.

> 우리는 남의 앞에서는 계집종처럼 온순하고 온갖 덕담을 폭포처럼 쏟아 놓으면서도 자국민들에게는 변학도처럼 사납고 갖은 악담을 소나기처럼 퍼붓는 족속들[146]

여기서도 남/녀=사나움/온순=주/종이라는 성적 은유가 게재되어 있다. 여성·역사·보편·근대를 남성(성)으로 간주하는 철학적 전제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147] 전체적으로 볼 때 여기서도 역시 '기획자 남성' '소비자 여성'의 배분이 성별로 이루어져 있다.

2.5 여성의 보편성/특수성 인식과 여성영웅론

『한양』의 커다란 특징 중 하나는 여성(론)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대의 『사상계』『청맥』과 달리 '여성' 기획을 다양하게 배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 필자도 위 두 잡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또 『사상계』와 『청맥』에서 여성 관련 특집이 전무한 점, 『창작과 비평』에서도 여성 관련 특집이 79년에 이르러서야 기획되는 점[148]에 비추어 볼 때 『한양』의 여성(론)에 대한 관심은 독보적, 선진적이라 할 수 있다.

『한양』의 특징은 여성과 관련한 기획란을 설치해 연재하는가 하면, 특집, 좌담회 등을 여러 차례 제시했다. 3호에서부터 「한국여인열전」이란 고정란을 마련해 황진이, 신사임당, 허난설헌, 논개, 김만덕, 계월향, 혜경궁 홍씨, 유관순, 정경부인 윤씨, 만명부인, 여시인 이복봉 등 여성들을 발굴·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

146 함원태, 「우리의 길을 찾자」, 앞의 글, 23쪽.

147 우줄라 I. 마이어, 송안정 옮김, 『여성주의철학입문』, 철학과현실사, 2006, 서론, 41-49쪽; 김복순, 『페미니즘 미학과 보편성의 문제』, 소명출판, 2005, 15-25쪽, 참조.

148 『창작과비평』에서 여성문제 관련 특집 또는 좌담회가 '최초'로 마련된 것은 79년 여름호 「오늘의 여성문제와 여성운동」에서였다.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다른 관점으로 이들을 평가 분석해 보였다. 예를 들면 김만덕의 경우 여성 상인이 아니라 '여협(女俠)'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김유신의 어머니 만명부인은 우유부단한 김유신을 구국의 영웅으로 만든 어머니로 발굴해 소개한다.

논문으로는 최용진의 「정(貞)과 우리 여성들의 전통」(2호, 62.4), 「빛을 남긴 현모상」(50호, 66.4), 「한국근대화와 여성문제」(64호, 65.6), 문철호의 「성과 도덕」(15호, 63.5), 「부녀와 부절(婦節)」(16호, 63.6), 서기원의 「가족윤리와 부의(婦儀)」(19호, 63.9), 이원엽의 「서독에 사는 여성들」(65호, 67.7)을 비롯해 15편 정도 게재되었으며, 좌담회로는 「우리는 8월의 아들 딸」(54호, 66.8), 「민족교육과 어머니」(64호, 67.6), 「여성과 현실인식」(105호, 72.2·3) 등이 있다.[149] 야담 및 전설과 관련해서도 문철호의 「여자에게 훈계받은 홍우원」 등 여성의 능동성, 주체성, 영리함 등을 초점화 한 글들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양』의 여성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분리 인식하는데 착목해 있다는 점이다. 여권론 등을 일찍이 소개, 적용, 분석, 평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 문제가 사회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통찰을 보여 준다. 같은 여성이라 할지라도 서양 여성과 동양 여성은 다른 측면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동양 여성의 경우에도 한국 여성과 자이니치 디아스포라 여성은 '같으면서도 다른' 존재임을 강조한다. 즉 여성이라는 보편성과, 지역·신분·시대·계급 등등 조건 및 환경에 따른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한양』의 여성론 관련 최대의 필자인 최용진은 '여성이 처한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구체적인 측면으로 표현되고 있다'[150]면서, 정(貞)의 개념 또한 때로는 효성으로, 때로는 모성애로, 때로는 정절 및 신의, 저항 및 반항으로 표현되었다고 강조한다. 민족문학 별로 그 민족의 정서적 도덕적인 측면에서 말할 수 있는 인간적인 전형으로서, 셰익스피어, 괴테, 프쉬킨의 여성의 전형은 '다를' 수밖에 없

149 장일우의 「여류 신인의 시원」(7호,62.9), 김순남의 「전후 한국소설의 여성상」(35호, 65.1), 박화성의 「현재 한국 여류 문단의 일별」(78호, 68.8) 등 문학과 관련된 것도 다수 있다.

150 최용진, 「정(貞)과 우리 여성들의 전통」, 『한양』 제2호, 1962.4, 133쪽.

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문학에서 이를 가장 잘 집대성한 것은 춘향의 형상이라 주장한다.

정은 단순히 '정이불음(貞而不淫)'에서의 정과 음의 대비로서만이 아니라 대이성관계, 부부관계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넘어 그 의미를 확장해야 한다고 역설하는데, 관권층의 부패 척결, 양반의 횡포 및 포악상을 고발하는 항거의 정신, 백성들의 원성 대변 등 사회성을 지니는 것으로 정의 의미를 '확장'하면서, 실제 인물은 아니지만 춘향이 정에 대한 최고의 이상태를 집대성한 인물이라고 규정한다. 당연히 이러한 논리의 끝에는 4.19 혁명에 나선 '여성영웅'들(138쪽)이 자리잡고 있다.

『한양』은 여성에 대한 특정한 사회적 행동규범 즉 절개 등을 굳게 지키는 통상적 방법[151]을 원용하지 않는다. 『한양』은 단순히 절개를 지킨 여성에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김만덕, 만명부인, 신사임당 등 기지, 능력, 저항정신 등을 통해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한 소위 '여성영웅'들을 강조한다. 피식민에서 '정조를 위협받는 여성'-이를 '해결하는 남성'이라는 구태연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능력과 기지를 발휘하는 여성영웅성으로 '피식민' '외세' '억압' '비자립' '부자유' 등에 '저항'하는 코드를 만들어 주체로 격상시키고 있다. 최용진은 '우리나라에서 여성문제는 형식상으로 해결된 것 같으면서도 실상 그 내용 면에서는 허다한 전근대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실상 여권문제는 남녀평등의 이념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요 거기에는 일정한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며 (…) 여권문제가 단순히 여성 개체의 문제이거나 가정적인 문제가 아니요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이유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152]

최용진에 의하면 제주 해녀는 여권문제에 있어 남녀의 일정한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대표적 예에 해당한다. 논자는 제주 해녀들이 경제적 독립 상태여서

151 실라 미요시 야거, 조고은 옮김, 『애국의 계보학』, 나무연필, 2023, 130쪽.
152 최용진, 「한국근대화와 여성문제」, 『한양』 제43호, 1965.9, 111-112쪽.

경제적 독립을 이룬 '평등'의 지위에 있는 것 같지만, 평등했다기보다 이중삼중의 고민 속에 놓여 있었다고 진단한다. 그 이유는 사회적 여건이 결부된 문제이다. 그 사회적 여건 가운데는 특수성의 예로 피식민지 여성의 경우가 있다.

> 민족적 독립이 없이는 여권의 보장이 불가능하다는데 대해서는 누구나가 통감한 바다. 그러기에 한국여성운동의 선각자들은 남녀평등을 주장하기 전에, 또 그것을 위해서 우선 민족의 독립을 주장하였으며 (…) 한국적 후진성이 청산되지 않고서는 여성문제를 둘러싼 전근대적 요소도 제거될 수 없다.[153]

여성문제의 특수성은 좌담회 「여성과 현실의식」에서 뚜렷하게 증폭된다. 이 좌담회는 여성문제상담소 소장 박정자와 한청동 중앙본부 및 지부소속 3인 등과 참여한 것으로서, '자이니치 디아스포라-여성'으로서의 차별 등으로 인한 고뇌 및 그 극복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우선 여성은 자이니치 디아스포라 중에서도 이중적으로 차별받는 위치임을 토로하면서, '중첩적 타자'라는 현실인식에 기초해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남북문제와 관련해서도 '당사자 인식'에 기초해 있다. "비록 몸은 이 땅에 있다 하더라도 민족의 일원으로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여 이에 호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모색하여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154]라고 강조한다.

당시 펼쳐지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지지부진함을 비판하면서, 국제적 긴장완화의 분위기가 펼쳐지는 시기인 만큼 민족적 대임을 완수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71년의 '국가비상사태선언'은 이러한 긴장완화를 거스르는 것으로 비판되었다. 자신들도 민족적 일원으로서 호응해야 한다면서, 한청동 한학동의 차원에서 회담 지원대회를 개최했음을 전달한다.

여성으로 자신들이 가정에서의 교육담당자라는 인식을 중요하게 펼쳐 보이면서, 가정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자각과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하며, 일본식 '통명'

153 위의 글, 113-114쪽.
154 「좌담회-여성과 현실인식」, 『한양』 제105호, 1972.2·3, 169쪽.

대신 '본명'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거의 일본인화하는 2세(자이니치의 70% 가량)에 대해서는 귀화의 역효과를 언급하면서, 한국인은 결코 일본인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일본인이라는 가면'은 사대의식의 변종일 뿐, 귀화인들은 결국 남북 및 일본 모두로부터 비난받고 소외되고 차별받는 존재일 뿐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한다. 현단계에서 여성들의 소임은 민족적 자각하에 가정 및 사회교육을 올바르게 담당하는 것이며, 나아가 한청동 및 한학동과의 연대 운동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피력하였다.

이 좌담회에서 여성은 교육의 주체, 운동의 주체였으며, 무엇보다도 냉철한 현실의식에 바탕한 자각의 주체, 인식의 주체로 위치되어 있다.

3 맺는말: 아시아 리저널리즘의 제6계보

주지하다시피 침략을 위한 내셔널리즘과 독립·해방을 위한 내셔널리즘은 아주 다르다. 50년대 일본에서는 아시아·아프리카와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까지 했는데, 미군정으로 인한 '미국 종속'이라는 점에서 일본과 아시아·아프리카가 공통된다는 '탈식민 인식' 때문이었다. 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비로소 미군정에서 벗어나게 된 일본의 경우 미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난바라 시게오(男原繁) 등 진보적 지식인들에 의해 내셔널리즘이 주창된다. 미군정에 의한 '레드 퍼지'(red purge: レッドパージ) 등을 거쳐 세력이 현저히 약화된 공산당도 당시의 일본 상황을 미제국주의에 의해 지배된 '반식민지' 상태라 규정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한 바 있다.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각 사상·정파들마다 일본이 독립국/종속국, 식민국/반식민국인가를 논쟁하면서 비전을 모색하기에 고심하였다. 진보적 역사학자인 이시모다 쇼(石母田正)도 『역사와 민족의 발견』(1952)에서 당대의 일본을 '민족의 위기'로 지적하면서 '민족의 긍지와 전통의 자각'을 내셔널리즘으로 호소했다. '피해'의 형태로 민족 문제가 재흥되거나[155] 이미 독립국이므로 경제부흥

155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앞의 책, 34쪽.

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부딪쳤다. 이시모다 쇼는 민족의 긍지와 전통을 살려 조국의 평화와 독립, 민주주의를 달성하도록 일본 국민의 역사를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0-60년대 일본의 이러한 내셔널리즘 주장은 '혁신 내셔널리즘'이라 불렸다.[156]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 연대도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었다. 텐리대학 조선학회 제12회 연차대회에서는 10여명의 한국-일본의 관련 전공자들이 참가하여 조선학 대신 '한국학'을 천명하고(박종홍), 한국사의 독자성과 주체성을 강조(이병도)하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었다.[157]

이러한 모색들은 '아(sub)트랜스내셔널-일본'의 '위치성'을 잘 보여준다. 일본은 '미국-트랜스내셔널'과의 관계에서는 '로컬'이지만,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아(sub)트랜스내셔널'에 해당한다. 50-60년대의 위와 같은 일본 내 내셔널리즘 관련 움직임들은 '아(sub)트랜스내셔널-일본'의 리저널리즘이 '트랜스내셔널/로컬'의 관계에서 탈식민·탈냉전을 주조하는 양상을 일러준다면, 61년 조선학회에서 일본학자들의 '한국학' 명명에 대한 동의는 '트랜스내셔널/아(sub)트랜스내셔널-일본'의 '저항'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자이니치 디아스포라가 62년 도쿄에서 '유일하게 한국어'로 발행한『한양』은 이와 또다른 모색을 꾀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50-60년대 일본 내에서의 일본학·내셔널리즘 관련 사상(정치)과 '탈식민 인식', 시기적으로는 총련에서 민단으로의 우위가 뒤바뀌는 변곡점과 맞닿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4.19과 5.16으로 이어지는 한국 내에서의 다양한 모색을 지켜보면서 자이니치 디아스포라(이향민-남성)로서 새로운 자각에 이르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은 '트랜스내셔널/아(sub)트랜스내셔널-로컬/로컬/로컬-로컬'(즉 제1세계/일본/한국/자이니치) 간의 각축이기도 했다.

『한양』은 '탈식민화'(일본, 한국, 자이니치)가 식민주의의 위계구조를 고스란히 재생산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공한다. 한국의 경우 50년대 담론의 선

156 오구마 에이지, 전성곤 옮김,『국민의 경계』, 소명출판, 2023, 738-745쪽.

157 정종현,「'조선학/한국학'의 국교정상화」,『두 번째 '전후'』,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한울, 1917, 19-49쪽.

진성을 규명하는 지점 중 하나가 '전통(론)'에 대한 입장이라면,[158] 4.19 후에는 탈식민, 탈냉전과 자유·민주·민족·통일 등의 방법론에 대한 입장이 이에 해당한다. 『사상계』『청맥』과 더불어, 『한양』은 자이니치 디아스포라의 입장에서 60년대의 제3세계-한국에 대한 전망을 열정적으로 모색한 잡지였다. 4.19 및 한일회담의 영향 아래 창간된 잡지로서, 민단 내 개혁을 강조하면서 저항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던 '한청동', '한학동'과 연관되어 있었다. 이들은 '새로운 근대화', 즉 '자이니치 디아스포라'의 자기의식 및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지향점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들은 '횃불'로서 적극적으로 '한국에 개입'함으로써 비로소 '국민'이 될 수 있었다.

『한양』의 방법론은, 미군정이 끝난 후 발전 일로에 있던 선진국 일본에서 그 발전 상황 및 탈식민의 문제를 '직접 경험'하면서 어떤 가능성의 지표를 설정할 수 있었던 '자이니치 디아스포라'이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또다른 억압의 이양' 속 중층적 타자인 자이니치 디아스포라가 '국민'이 되고자 충동했을 때, '자이니치 디아스포라 민족주의'라는 독특한 방법론이 도출될 수 있었던 것이다. '자이니치 디아스포라 민족주의'는 '선 민주-복지론', 수출입국론 거부-내수 증대의 경제적 민족주의, 내재적 발전론 등을 지향하면서 '다른 아시아-한국'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자이니치 디아스포라 민족주의'에는 '또 다른 억압의 이양' 속 식민/피식민, 선진/후진, 문명/야만의 관계를 타파, 극복하려는 '이향민 남성'의 트랜스내셔널/로컬 전략이 개재되어 있었다. 차별과 혐오의 일본과도 다르고, '오염된 자유민주주의' 아래 신음하는 한국과도 다르고, 공산주의 북한과도 다르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가장'한 아시아·아프리카의 여러 독재와도 '다른' '아시아'를 구축하는 방법론이었다.

이와 같은 '자이니치 디아스포라 민족주의'의 양상은 '아시아 리저널리즘'의 기존 계보와 다른 것이었다. 발전론과 민주론이 결합된 형태로서, 제6계보라 명명되었다. 제5계보인 『청맥』에서는 '탈냉전'의 기치 아래 통일론을 최종심급으

158 전승주, [1950년대 한국문학비평 연구-전통론과 민족문학론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23집,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03, 300-331쪽.; 서영채, 「민족, 주체, 전통-1950-60년대 전통논의의 의미」, 『민족문학사연구』 제34집호,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07, 10-48쪽.

로 설정하고 ‘자유로서의 발전’을 강조했다면, 제6계보인 『한양』에서는 ‘탈식민’의 기치 아래 ‘자유’가 계급, 성별 범주보다 ‘반외세’ 범주에 의해 제한되면서 ‘민주’가 강조되고 있었다. 일본의 발전은 냉전의 수혜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탈냉전 인식은 약화되어 있었다. 한편으로는 자이니치에 의해 간행된 잡지인 탓에 나타나는 태생적 한계, 다른 한편으로는 분단-통일 문제로 총련과 엮이지 않으려는 민단 쪽의 의식적 노력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제5계보(『청맥』)에서는 ‘분단’이 핵심적 작동축이었으며, 제6계보에서는 ‘분단’보다 ‘발전’ ‘민주’가 핵심적 작동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양』은 ‘오염된’, ‘외세의존적’ ‘자유민주주의’에 저항하면서 자립, 자주에 기초한 진정한 민주주의, 민족주의를 기획하고 있었다. 제5계보인 『청맥』이 ‘민중’을 주체로 설정했다면, 제6계보인 『한양』은 ‘시민’을 주체로 호명하고, 특히 여성을 ‘시민’으로, 4.19의 주체로 적극 호명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방법론 구축의 계기가 된 것은 4.19였다. 정치 담론에서 신탁통치는 ‘국제적 정의를 윤락시키는 폭행’이라 언급되었으며, 미·소/한국=남자/여자라는 성적 은유를 사용하고 있었다.

『한양』이 한국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책으로 제시한 것은 중농주의(농촌근대화론)가 아니었다. 『한양』의 경제발전론은 ‘경제적 민족주의’로 불릴 만큼 자주, 자립정신에 철저히 기초하고 있었다. ‘농업’ 등 특정 부문을 희생시키지 않고 균형적 발전을 꾀한다는 점에서, 또 수출입국론을 거부하는 ‘내수 증대’ 정책이라는 점에서, 『사상계』(제1계보)의 내포적 공업화, 『청맥』(제5계보)의 ‘자주적인 내포적 공업화’ 및 박정희 정권의 수출 중심 개발론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여기서는 가족과 국가가 동일시되고 있었다. 이 때의 가족은 가부장적 구조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한양』의 경제개발론은 남성젠더적이었다.

『한양』은 ‘아시아적 정체성’을 ‘부정’했으며, 트랜스내셔널-미국과의 관계도 ‘종미(從美)’로 귀결될 경우 사대주의에 해당한다고 피력하였다. 『한양』은 『사상계』(제1계보)나 『청맥』(제5계보)보다 더 강력하게 62년부터 ‘마치 사시(社是)처럼’ 주체적 근대화론 및 내재적 발전론을 주창, 선도하고 있었다. 이는 국내 학계 뿐 아니라 일본 및 북한학계와 비교해도 동시성을 띨 정도로 선구적인 것이다.

내재적 발전론 ‘일반’이라는 세계사적 기본법칙에 입각하면서도 내재적 발

전론의 '특수'를 설정함으로써 일국사적 발전단계론을 극복할 시야를 확보하고 발전의 '복수 경로'를 상정할 수 있었다. '일본사를 위한 한국사'에 초점을 맞추며 '아시아적 특질'에 집착한 일본에서와 달리, 『한양』은 '아시아적 특질'보다 '한국적 특질'을 강조했다. '유럽과 다른 아시아'라는 단위로 한국을 위치시키지 않고, 아시아 내의 '다른 아시아'로 '한국(인)'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다른 아시아-한국'이 가능했고, 선진/후진=우/열이라는 단순 이분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여기서는 남성/여성=주체/비주체=생산/소비=성찰/비성찰의 영역으로 배치하고 있었다.

잡지라는 특성상 여성이 '혁명주체' '여성영웅'으로도, '소비주체'로도 설정되어 있었으나, 『사상계』(제1계보)나 『청맥』(제5계보)과 달리 '여성' 기획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었으며, 여성 필자도 다른 잡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을 정도로 여성(론)에 대한 관심은 독보적이었다.

다만 '자이니치 디아스포라 민족주의'의 '대표자'는 '남성(성)'으로, 그 수행자는 '여성(성)'으로 설정하고 있어, 대표자-수행자라는 모종의 위계관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행동하는 여성'이란 주체성은 확보되었지만, 여전히 가부장적인 위계적 권력관계가 교묘하게 재생산·유지되는 한계가 확인되었다. 이는 『청맥』(제5계보)의 선진성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청맥』에서는 '남성이 아닌 것은 아닌'의 이중부정 형태로 당대 한국 및 남성(성)이 일단 부정된 후 '청년-남성(성)'을 대신 호명하면서 통일의 주체로 설정한 반면, 『한양』에서는 남성(성)이 부정된 바 없다.

젠더 질서는 불평등, 부정의, 정체성, 억압 등의 근원으로서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일종의 사회구조에 해당한다. 『한양』을 젠더 범주로 분석한 결과 『한양』의 진보성 및 한계가 더욱 정치하게 확인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양』이 정치, 경제, 문화, 사상의 각 영역에서 정합적으로 기획되고 이론적으로 구현되어 있음을 전면적으로 분석해 냈다. 앞으로 남은 과제가 있다면 중시기(72) 이후 『한양』의 변동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은 물론, 동시기 일본에서 간행된 잡지 『조선문예』『청구』『문학예술』『계간 삼천리』 등 50-70년대 일본 내에서의 다양한 모색과 비교·분석하는 일이다. 또한 국내에서 60년대에 간행된 『세대』『창작과 비평』 등의 방법론과도 비교해야 한다. 더 넓

게는 중국, 미국, 러시아, 독일 등의 '디아스포라'로 확장하여 좀더 광범위한 리저널리즘의 변위들을 천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한양』, 한양사, 일본 도쿄, 1962.3-1984.4

김인재 편, 『민족의 존엄』(창간 10주년 기념논설집), 일본 도쿄: 한양사, 1972.

_____, 『시대정신과 한국문학』, 일본 도쿄: 한양사, 1972.

_____, 『민족지성의 길』, 일본 도쿄: 한양사, 1974.

단행본

강원봉 외, 『가지무라 히데키의 내재적 발전론을 다시 읽는다』, 아연출판부, 2018, 67-68쪽.

강진호 외, 『증언으로서의 문학사』, 깊은샘, 2003, 151-157쪽.

고길희, 『하타다 다카시』, 지식산업사, 2005, 18-19쪽.

김복순, 『페미니즘 미학과 보편성의 문제』, 소명출판, 2005, 15-25쪽.

김선주·강석승 편저, 『4월 학생민주혁명』, 지식과 교양, 2013, 317쪽.

김은하, 『개발의 문화사와 남성주체의 행로』, 새미 국학자료원, 2017, 48-133쪽.

김현수, 『일본에서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재일조선인운동을 중심으로-』, 선인, 2016, 1-276쪽.

남기정, 『기지국가의 탄생』, 서울대출판문화원, 2016, 79-136쪽.

문경수, 고경순·이상희 역, 『재일조선인 문제의 기원』, 문, 2016, 1-300쪽.

민단50년사편찬위원회, 『민단 50년사』, 재일본대한민국민단, 1997, 85-94쪽.

민족문학연구소, 『영구혁명의 문학들』, 국학자료원, 2012, 73-100쪽.

서중석, 『한국현대사 60년』, 역사비평사, 2007, 61-88쪽.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전후'의 탄생』, 그린비, 2013, 16-81쪽.

신생국강좌, 『신생국의 이데올로기』, 세계사, 1966, 1-320쪽.

6.3 동지회, 『6.3 학생운동사』, 역사비평사, 2001, 47쪽.

윤건차, 『자이니치의 정신사』, 한겨레출판, 2016, 119-218쪽, 522쪽.
윤송아, 『재일조선인문학의 주체 서사 연구』, 지식과 교양, 2020, 1-563쪽.
이헌홍, 『재일 한인의 생활사 이야기와 문학』, 부산대학교 출판부, 2014, 1-415쪽.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동아시아한국학의 분화와 계보』, 소명출판, 2013, 7-10쪽.
임경규, 『집으로 가는 길-디아스포라의 집에 대한 상상력』, 앨피, 2018, 1-354쪽.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 박인동 역, 『일본 재판에 나타난 재일 코리안』, 세창출판사, 2023, 40쪽
정창훈, 『한일관계의 '65년체제'와 한국문학』, 소명출판, 2021, 1-264쪽.
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안연구소, 『재일코리안 사전』, 선인, 2012, 1-518쪽.
한영혜·김인수·정호석, 『경계와 재현-재일한인의 국적, 사회조사, 문화표상』, 한울, 2020, 1-294쪽.
나카무라 일성, 정기문 옮김, 『사상으로서의 조선적』, 보고사, 2020, 1-305쪽.
다케다 세이지, 재일조선인문화연구회 옮김, 『'재일'이라는 근거』, 소명출판, 2016, 1-311쪽.
리오 T.S. 칭, 유정완 옮김, 『안티-재팬』, 소명출판, 2023, 13쪽.
마루카와 데쓰시, 백지운·윤여일 옮김, 『리저널리즘』, 그린비, 2008, 1-215쪽.
미즈노 나오키·문경수, 한승동 역, 『재일 조선인: 역사, 그 너머의 역사』, 삼천리, 2016, 1-272쪽.
실라 미요시 야거, 조고은 옮김, 『애국의 계보학』, 나무연필, 2023, 1-252쪽.
아마티아 센, 김원기 옮김, 『자유로서의 발전(Development As Freedom)』, 갈라파고스, 2013, 39-148쪽, 399-419쪽.
오구마 에이지, 전성곤 옮김, 『국민의 경계』, 소명출판, 2023, 738-745쪽.
오드 아르네 베스타, 오강준 옮김, 『냉전의 지구사』, 에코리브르, 2020, 57쪽, 164쪽, 186쪽.
요시자와 후미토시, 엄태봉 옮김, 『한일회담 1965』, 이담북스, 2022, 10쪽.
우줄라 I. 마이어, 송안정 옮김, 『여성주의철학입문』, 철학과현실사, 2006, 41-49쪽.
존리, 김혜진 옮김, 『자이니치: 디아스포라 민족주의와 탈식민 정체성』, 소명출판, 2019, 1-405쪽.

하타다 다카시 편, 주미애 옮김, 『심포지엄 일본과 조선』, 소명출판, 2020, 1-636쪽.

林茂澤, 『在日韓國青年同盟の歷史』, 新幹社, 2011, 1-343쪽.

李瑜煥, 『日本の中の三十八度線』, 洋 社, 1980, 1-438쪽.

John Lewus Gaddis, *We Now Know*, Oxford Univ. Press, New York, 1997, p.293.

논문

고명철, 「1960년대의 『한양』에 실린 소설의 문제의식」,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6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0.3, 197-223쪽.

_____, 「민족의 주체적 근대화를 향한 『한양』의 진보적 비평정신」, 『영구혁명의 문학들』, 국학자료원, 2012, 73-100쪽.

김복순,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여성문학연구』 제1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7-60쪽.

_____, 「학술교양의 사상형식과 '반공-로컬 냉전지(知)의 젠더—1950년대 『사상계』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73-125쪽.

_____, 「『사상계』 기행문에 나타난 아시아 리저널리즘의 재편양상과 재건의 젠더」((NRF-2015S1A5A2A01014601), 『여성문학연구』 제3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217-260쪽.

_____, 「『사상계』의 「움직이는 세계」에 나타난 리저널리즘의 계보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젠더」,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88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20, 93-137쪽.

_____, 「『청맥』에 나타난 리저널리즘의 탈냉전지(知)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젠더-특집 및 권두언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5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225-270쪽.

_____, 「『청맥』에 나타난 리저널리즘의 탈냉전지(知)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젠더 2-문학비평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5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294-339쪽.

김용섭, 「일본·한국에 있어서의 한국사서술」, 『역사학보』 제31집, 역사학회, 1966.8, 128-147쪽
김유중, 「장일우 문학비평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7집, 한국현대문학회, 2005, 389-421쪽
김주현, 「1960년대 '한국적인 것'의 담론지형과 신세대의식」, 『상허학보』 16, 상허학회, 2006, 379-410쪽.
김태기, 「한국정부와 민단의 협력과 갈등관계」,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제3권 1호, 전남대학교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 2000, 60-97쪽.
미쓰이 다카시, 「전후 일본에서의 조선사학의 개시와 사학사상—1950-6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제 153집, 한국사연구회, 2011, 347쪽.
박수연, 「1960년대 시적 리얼리티 논의-장일우의 『한양』지 비평과 한국문단의 반응」, 『한국언어문학』 제50집, 한국언어문학회, 2003, 217-238쪽.
박준형, 「하타다 다카시와 '전후 조선사학'의 가능성」, 『인문논총』 제74권 제4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 441-474쪽.
박찬승, 「한국학 연구 패러다임을 둘러싼 논의-내재적 발전론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제35집,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2007, 30-46쪽.
서영채, 「민족, 주체, 전통-1950-60년대 전통논의의 의미」, 『민족문학사연구』 제34호, 민족문학사학회, 2007, 10-48쪽.
손남훈, 「『한양』 게재 시편의 변화과정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70집, 한국문학회, 2015, 137-188쪽.
_____, 「4.19 혁명정신의 계승과 정권 비판 논리」, 『문창어문논집』 제52집, 문창어문학회, 2015, 215-254쪽.
_____, 「『한양』 게재 재일 한인 시의 주체 구성과 언술 전략」,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1-245쪽.
_____, 「1960년대 『한양』의 민족주체성 회복 담론」, 『인문학연구』 제56집,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381-410쪽.
_____, 「『민족의 존엄』에 나타난 민족주체성 담론과 정치비판의 논리」, 『한민족문화연구』 제80집, 한민족문화학회, 2022, 127-160쪽.
이경구, 「개념사와 내재적 발전: '실학' 개념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제213집,

역사학회,, 2012.3, 50쪽.
이상신,「부르크하르트의 문화사의 과제」,『서양사론』 제69호, 한국서양사학회, 2001, 5-34쪽.
이승진,「1960-80년대 재일잡지미디어 지형과 재일문화」,『일본문화학보』, 제81집, 한국일본문화학회, 2019, 27-53쪽.
이재봉,「국어와 일본어의 틈새-『한양』『삼천리』『청구』의 이중 언어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한국문학논총』 제47집, 한국문학회, 2007, 163-199쪽.
이진원,「전후 재일코리안 청년 학생 운동의 흐름 및 성격」,『일본학』 제48집,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9, 85-110쪽.
이헌홍,「『한양』 소재 재일 한인문학의 연구방향과 과제」,『한국민족문화』 제25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5, 101-122쪽.
임유경,「낙인과 서명」,『상허학보』 제53집, 상허학회, 2018, 191-236쪽.
임헌영,「74년 문인간첩단 사건의 실상」,『역사비평』 제13집, 역사비평사, 1990. 겨울, 283-301쪽.
장세진,「라이샤워와 전후 미국의 지역연구」,『숨겨진 미래』, 푸른역사, 2018, 224-269쪽.
장백일,「세칭 문인간첩단 사건」,『문단유사』, 한국문인협회 편, 월간문학 출판부, 2002, 57-62쪽.
전승주,「1950년대 한국문학비평 연구-전통론과 민족문학론을 중심으로」,『민족문학사연구』 제23집,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03, 300-331쪽.
정종현,「조선학/한국학의 국교정상화」,『두 번째 '전후'』,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한울, 2017, 19-49쪽.
정창렬,『민중의 성장과 실학』, 선인, 2014, 440-444쪽.
조기은,「민단계 재일조선인의 한국민주화운동-재일한국청년동맹을 중심으로」,『한국학연구』 제59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0, 485-518쪽.
_____,「민단계 재일조선인의 한국민주화운동-민단민주화운동세력과 김대중의 '연대'를 중심으로」,『한국학연구』 제75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0, 115-151쪽.

조성을,「일본의 문화사학과 한국의 문화사학」,『한국사상사학』 제24집, 한국사상사학회, 2005, 472-473쪽.

_____,「조선후기 실학의 근대성에 대하여」,『역사비평』 제13집, 역사비평사, 1990, 387쪽.

_____,「전후일본에서의 한국사 시대구분과 한국학계에의 영향」,『한국사학사학보』 제11호, 한국사학사학회, 2005, 131쪽.

조은애,「디아스포라의 교착과 '연대'의 임계」,『디아스포라의 위도』, 소명출판, 2021, 331-392쪽.

조현일,「『한양』지의 장일우, 김순남 평론에 나타난 민족주의 연구」,『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3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543-572쪽.

하상일,「1960년대 문학비평연구: 『한양』『청맥』『상황』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159쪽.

_____,「1960년대 문학비평과 『한양』,『어문논집』 제50집, 민족어문학회. 2004, 287-325쪽.

_____,「재일 한인 잡지 소재 시문학과 비평문학의 현황과 의미-『조선문예』『한양』『삼천리』『청구』를 중심으로,『한국문학논총』 제42집, 한국문학회, 2006, 391-417쪽.

_____,「1960년대 『한양』 소재 재일 한인 시문학 연구」,『한국문학논총』 제47집, 한국문학회 2007, 201-227쪽.

_____,「1960-80년대 재일 종합문예지 『한양』 게재 문학작품의 서지적 연구」,『한민족문화연구』 제74집, 한민족문화학회, 2021, 47-78쪽.

_____,「1960-80년대 재일 종합문예지 『한양』과 한국문학의 교섭」,『한민족문화연구』 제77집, 한민족문화학회, 2022, 7-42쪽.

_____,「1960-80년대 재일 종합문예지 『한양』과 재일조선인문학의 영향」,『한민족문화연구』 제82집, 한민족문화학회, 2023, 243-282쪽.

한승헌,「『한양』 관련 문인 사건」,『권력과 필화』, 문학동네, 2013, 50-54쪽, 131-140쪽.

황병주,「1960년대 비판적 지식인 사회의 민중인식」,『기억과 전망』 2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9, 110-147쪽.

마루야마 마사오, 「초국가주의의 논리와 심리」, 김석근 옮김,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 한길사, 1997, 61-62쪽.
미쓰이 다카시, 「전후 일본에서의 조선사학의 개시와 사학사상—1950-6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제153집, 한국사연구회, 2011, 347쪽.

Abstract

Gender in the Genealogies of Regionalism and the Trasnational/Local Aspects of Zainichi-Korean Diaspora In *Han-Yang*
—focused on the discourses —

Kim, Boksoon

This study is the first full-scale study on the discourse of *Han-Yang* (62.3, published in Tokyo). In this paper, for the first time, the specific link between *Han-Yang*, the 'Korean Youth Alliance(*Hanhakdong*) in Japan', and the 'Korean Students' Union in Japan'(*Hanchongdong*) was revealed. Here, I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method' and the 'gender' corelation of the post-colonial and post-Cold War in the discourse of Han-Yang.

These were connected to the 'new modernization', that is, the self-consciousness and political, cultural and social orientation of the 'Zainichi diaspora'(displaced people-men), and were able to become 'people(citizens)' by actively 'intervening in Korea'. *Han-Yang* confirms the sixth genealogy of Asian regionalism.

Han-Yang advocated the theory of independent modernization and internal development. These were a pioneering work that was synchronous with Japanese and North Korean academia.

While it is based on the 'general' theory of internal development, it also sets out the 'specific' aspects of the theory of internal development. By doing so, it was possible to secure a perspective to overcome the theory of stages of development and to assume 'multiple paths' for development. As a result, *Han-Yang* were able to break away from the simple dichotomy that developed/underdeveloped=superiority/inferiority.

Not only were the 'women's' projects diverse, but *Han-Yang*'s interest in women (theology) was matchless. One of the biggest characteristics of *Han-Yang*'s theory of women was the 'separation' of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in relation to women.

Gender research provides an efficient way to explore inequality, injustice, and identity in theories, events, and objects. As a result of the gender study, the progressiveness of *Han-Yang* was derived specifically.

Key words: the Three-Self, the Four-Anti, *Min-Dan*, Gravure, Kim InJae, *Hanchongdong*, *Hanhakdong*, Zainichi diasporic nationalism, economical nationalism, the internal development theory, theory of 'democracy-welfare first', female citizen, independent modernization theory, national industrialization theory, Hatada Takashi, Gajimura Hideki, The Korean-Japanese Conference, family-nation symbol, Bandung's Conference, things Korean

논문제출 / 2024.02.29.
논문접수 / 2024.03.16.
게재확정 / 2024.04.06.